

연구총서 99-21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실태 평가
사상·정치·군사분야를 중심으로

전 현 준

통일연구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98년 8월 이래로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강성대국」은 '사상·군사·정치·경제' 등 4개분야에서의 「강국」으로서 「경제대국」만 제외하고 모두 달성되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 왜 「강성대국」 건설을 주장하기 시작했는가를 분석하고 과연 북한의 주장대로 사상·군사·정치 분야에서의 「강성대국」이 건설되었는가를 분석·평가하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I. 「강성대국」 건설 주장 배경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주장한 배경은 지도자 김정일의 개인 심리적 배경, 국내 정치적 배경, 국제정치적 배경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눠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김정일의 '거물선호의식'이다. 김정일은 왜소한 신체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김정일 개인의 열등감은 국가적 열등감으로 치환되고 이것은 국가정책 결정과정으로 나타난다. 김정일이 「강성대국」 건설을 주창한 것도 공작새가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적을 물리치기 위해 날개 깃을 세우듯이 북한이 대단한 힘과 역량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과시함으로써 '약소국'인 북한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의 '巨物選好行爲'는 자신의 신체적 열등을 보상하기 위한 작위적 행동이라는 가설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김정일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호도이다.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적인 결함 외에 김정일의 경제정책 오작용으로 인한 경제침체는 김정일의 사후적 정통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특히 사회주의권 붕괴이

후 경제난 심화는 김정일의 권위를 더욱 약화시켰다. 그러나 김정일은 사회주의권 붕괴, 김일성 사망, 자연재해 등으로 악화된 경제난과 주민사기 저하 방지를 위해 '고난의 행군정신,' '한식술'론, '사회주의 총진군,' '강계의 혁명정신' 등 다양한 주민동원 구호를 제시하였으나 내부자원·에너지·주민열정 부족으로 인해 경제침체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김정일시대 개막을 앞두고 주민들의 심리적 전환을 통한 주민통합과 동원이 필요하게 된 북한은 새롭고 신선한 주민동원 정책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필요가 「강성대국」 건설 제시로 나타났을 것이다.

셋째, 강대국의 대북압박 제어 필요성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심한 고립감에 휩싸여 왔고, 자본주의 국가들 특히, 미국으로 부터의 '공격' 위협을 느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이의 표현이 강성대국 건설 주장으로 나타난 것 같다. 아울러 김정일은 경제난으로 인한 김정일의 권위 약화를 「강성대국」이라는 공격적인 용어를 통해 내부통합을 이룩, 이를 대외에 과시함으로써 강대국의 대북압박을 회피해 보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시대를 맞아 북한은 김정일에 의해 사상·정치·군사적 「강성대국」이 달성되었음을 과시, 내부적으로 김정일의 정치적 정당성 획득과 주민통합을 이루고 이를 외부에 과시, 대북 압박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II. 「사상강국」 건설 실태 및 평가: 주체사상의 내면화 정도

북한의 「사상강국」 건설 실태는 위로부터의 철저한 세뇌교육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주'의 고수라는 명분을 내걸고 등장한 주체사상은 '혁명적 수령관'으로 전변되면서 개인우상화 착근을 위한 '허위의식'으로 변화였다. 주민들을 김일성 개인에 대

한 ‘충성동이,’ ‘효성동이’로 개조시키기 위한 각종 세뇌교육은 주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만이 유일한 지도자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거부는 곧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단순논리가 통하게 되었다. 이러한 화석화된 인식체계(fossilized perception system)는 수령이외의 대안세력 등장을 철저히 봉쇄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주요한 기본가치인 집단주의적 가치는 점점 소멸해 가는 것이 발견되었다. 비록 귀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이기는 하지만 집단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풍조가 북한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특히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개인주의적 사조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장차 김정일 개인에 대한 불복종은 물론 사회주의체제 자체에 대한 거부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점이다.

북한의 「사상강국」 건설 주장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비록 북한내에 「사상강국」이 건설되었다 할지라도 매우 비평등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즉 북한은 외부사조의 유입을 철저히 봉쇄하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통해 주체사상이나 수령론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만일 외부사조의 유입이 확대된다면 주체사상의 정수인 수령론이 일거에 붕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은 이것을 우려하여 개방을 거부하고 ‘황색바람’ 차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사조의 유입은 필연적일 것이고 언젠가는 자유주의와의 한판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 경쟁에서 주체사상이나 수령론이 승리한다는 보장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 「사상강국」 북한의 최대 약점이다.

Ⅲ. 「군사강국」 건설 실태 및 평가: 유·무형의 군사력

전체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은 막강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화생무기를 필두로 한 대량살상무기의 보유, 다량의 재래식 무기 보유, 군사실서의 지하화, 주민의 단결력과 투쟁심 등이다. 따라서 현재로서 북한이 「군사강국」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현대전이 최첨단 과학장비전쟁이라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의 군사력이 막강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비록 군수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재래식 무기면에서는 서방보다 20년이상 낙후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경제난으로 인해 훈련 절대량 부족·군인에 대한 부식보급 불충분·군민관계 악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 측면에서 북한 군사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IV. 「정치대국」 건설 실태 및 평가: 정치적 통합 정도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북한정치체제는 ‘수령유일지배체제’라는 점이다. 비록 북한주민의 정신적 지주였던 수령과 수령의 顯現인 주석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후계자인 김정일이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를 ‘그런대로’ 지도해 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체제가 정치적 곤란을 겪을 것 같지 않다. 특히 김정일이 가장 큰 강제력인 당의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및 군권을 장악하고 있고, 비록 주민들의 절대적 지지는 못받고 있지만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저항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대국’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우선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정일에 대한 북한인민들의 평가가 낮은 이유는 첫째, 1973년 김정일이 등장한 이후부터 북한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둘째, 김정일의 성

격이 대정치가답지 못하다는 점 등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김정일이 획기적인 경제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주민폭동 발생 가능성이 있다.

비록 그가 사전적 정통성(ex ante legitimacy)을 확보하고 있고 강제력을 장악하고는 있지만 경제난 해결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을 보장해 주지 못했을 때는 사후적 정통성(ex poste legitimacy)을 상실, 실각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취약성이 계속 남아 있는 한 북한을 '정치대국'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V. 종합평가 및 전망

가. 종합평가

본 연구는 북한이 지난해부터 강조하기 시작한 「강성대국」 건설 주장을 평가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강성대국」을 판단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수행될 수 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국력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어떤 객관적 기준도 마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강대국인 A가 다른 강대국 B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약소국으로 분류된 C국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약소국인 C국이 강대국인 A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A국이 '大國'으로 분류된 것은 오류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강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설정은 불가능하였고 결국 필자의 자의에 의한 기준이 제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논리적 전제로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추이를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내부적 사상통일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에는 주체사상이외에는 어떤 사상도 배태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이 자력갱생하는 과정에서 장마당이나 암시장을 통해 상거래 행위를 하고는 있으나 이것을 초기자본주의적 행태로 규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비록 이것이 자본주의적 맹아라 할지라도 주체사상을 대체할만큼 강력하지 못하다. 물론 집단주의 정신은 점점 쇠락해가고 있는 증거들이 나타났다. 국가보다는 가족과 나라를 더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령에 대한 존경심은 변화가 없고 그것은 아랍국가들의 어떤 근본주의(fundamentalism)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러한 사상적 공고성은 위로부터의 강제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모든 사상통제는 주민의 의식수준이 고려되어 시행된다는 점에서 강제가 작동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그 강제를 수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결국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모두 지배자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내면화된다는 점에서 북한이라는 특정한 지역에서의 주체사상도 북한주민들에게는 준수해야 할 규범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북한주민들이 자력으로든 타력으로든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거부하고 타도하려고 노력한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개방을 통해 외부사조 유입이 증대될 때에도 주체사상이 고수될 것인가는 의문이다. 즉 주체사상이 개방을 통해 자유주의와 경쟁하여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주체사상에 대한 지지는 폐쇄된 체제에서의 우세 즉, 거센 광풍이 차단된 '溫床'에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둘째, 외부침입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은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최강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규·비정규군 수, 재래식 무기의 수, 무기의 지하배치, 산악지형, 빨치산 경험, 주민들의 대미 악감정, 남한의 군사적 취약성 등은

북한의 군사적 강점이 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미사일,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남한은 물론 일본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군사력은 세계 5위 이내로 평가받을 만큼 막강하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인해 무기의 노후화, 군대의 훈련부족, 유훈난, 보급난, 주민의 일탈 등이 심해짐에 따라 군의 사기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향후 언제까지 과도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셋째, 강제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해방이후 김일성은 처절한 숙청을 통해 정치권력을 유지하였고, 김정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당권과 군권 장악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주민내면에서는 반김정일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물론 반김정일 분위기가 북한사회주의 자체를 싫어하거나 주체사상을 거부하는 것으로 등치되어서는 않될 것이다. 다만 경제난 심화이후 김정일의 失政을 '속마음으로' 싫어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김정일 권력도 취약해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김정일이 왜 고인이 된 김일성의 '망령'을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도 여기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황장엽의 망명은 반김정일 분위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치대국'은 건전한 비판세력의 존재, 권력의 정기적 순환, 시민사회의 인정 등이 전제되었을 때 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대국도 다원주의 사조가 유입되었을 때도 존속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북한의 '사상강국, 군사강국, 정치대국' 달성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나 그 기반이 공고하지는 않다는 것이 종합 판단이다. 이러한 사실은 김정일 정권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전망케 한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목적도 김정일 정권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

다는 현실인식의 발로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강성대국」 건설의 진정한 목표는 김정일 정권의 공고화에 맞춰져 있다. 결국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은 자본주의·자유주의·반독재·반개인숭배 사조를 배격하고, 김정일 유일지배정권에 대한 도전을 예방하여 ‘김정일 왕국’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전 망

북한은 현재 이념·정치·경제·군사·외교·대남 등 모든 부문에서의 「강성대국」 건설을 당면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주민동원을 위해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2000년 대에도 사상·군사·정치 등 각 분야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주민동원 운동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사상분야에서는 주체사상과 함께 ‘김정일사상’인 ‘애국·애족·애민 이념’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카리스마나 정치적 권위가 부족한 김정일은 김일성을 비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김일성=김정일’ 구호를 더욱 강조하는 동시에 자신의 독자적 업적을 부각시키는 선전선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자본주의 ‘황색바람’ 차단을 위해 주체사상을 강조하고 수령과 수령후계자에 대한 충성심 고취와 집단주의의 우월성 선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사상이완 방지를 위해 군부를 비롯한 폭압기구의 대민 감시 및 탄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척결 사업이나 이를 담당할 조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군사분야에서는 「군사강국」 유지를 위해 군비현대화, 대량살상무기 개발 지속, ‘선군정치’를 앞세운 군우대 정책 지속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걸프전쟁이나 유고전쟁을 통해 현대전쟁은 전

자전쟁이라는 점을 터득한 북한은 군비의 과학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사일이나 생화학무기 개발 또한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외적요인 즉, 대미·일관계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미사일 개발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방위원장중심의 군우선체제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에 대한 공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사회의 병영화를 통한 체제유지 정책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동북아 안보 또는 남북군사관계의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치분야에서는 김정일의 취약한 주민 지지도 만회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가장 큰 약점은 인민경제 파탄의 주범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인민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경제회복책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방법은 자력갱생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부예비'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인민경제 회생을 도모하는 방법은 '외부예비'를 도입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북한은 국가적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미국·일본·남한·유럽 등의 원조를 받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간헐적인 남북당국간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은 지속적인 당권장악을 위해 당중앙위 비서국 조직지도부를 더욱 확대하고 부부장급을 충성파로 보임하는 한편, 군권장악을 위해 군에 대한 통제 및 위무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은 '균형적인 당군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일은 당·군간의 충성심 경쟁 유발과 상호감시를 통해 당·군 어느 쪽도 김정일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나치게 비대된 군부의 견제를 위해 당의 위상 제고 방안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제7차 당대회 또는 제3차 당대표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목 차 -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2
II. 「강성대국」론 내용 및 등장 배경	7
1. 「강성대국」론의 내용	7
2. 지도자 개인적 배경	9
3. 국내정치적 배경	12
4. 국제정치적 배경	14
III. 「사상강국」 평가: 주체사상의 내면화 정도	17
1. 북한의 사상정책	17
2. 주체사상에 대한 주민의 이해	18
3. 수령에 대한 태도	27
4. 집단주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32
5. 소결	36
IV. 「군사강국」 평가: 유·무형의 군사력	38
1. 북한의 군사정책	39
2. 유형의 군사력	42

3. 무형의 군사력	56
4. 소결	58
V. 「정치대국」 평가: 정치적 통합 정도	60
1. 북한의 정치통합 정책	60
2. 김정일의 정치적 정당성	63
3. 물리적 강제력 장악	69
4. 주민들의 김정일에 대한 태도	77
5. 소결	82
VI. 종합평가 및 전망	84
1. 종합평가	84
2. 전 망	87
참고문헌	89

I. 서론

1. 연구 목적

사회주의권 붕괴, 김일성 사망, 연이은 자연재해 등으로 체제붕괴 위기에까지 직면했던 북한은 이의 타개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고난의 행군’, ‘자력갱생’ 구호하에 ‘내부예비’를 총동원하였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적 자존심을 포기한 채 외국으로부터의 식량지원을 수용하였다. 그 결과 1998년부터 북한경제가 약간씩 호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강성대국」¹⁾을 제시하였다. 「강성대국」론을 통해 북한은 ‘사상강국’ ‘정치대국’ ‘군사강국’ 등은 이미 달성하였기 때문에 향후 ‘경제대국’만 달성하면 명실상부한 「강성대국」 건설이 완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비록 경제가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수십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강성대국」을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강성대국」 건설 주장은 주민동원구호일까, 국가목표일까? 과연 북한은 경제분야만 제외하면 여타분야에서 「강성대국」일까? 등의 의문이 제기된다. 사실 북한은 철저한 폐쇄·독재 국가이고, 인구 약2,200만명, 면적 122,762Km², 1인당 국민총소득 573달러²⁾로서 ‘대국’이 될 만한 요소는 거의 없다. 물론 군병력이 105만 여명³⁾으로 지상군 숫자로는 세계5위의 군사강국⁴⁾이지만 장비의 질

1) 「로동신문」, 1998.8.22.

2)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1999.11), pp. 9~16.

3) 대한민국 국방부는 117만명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9」 (서울: 국방부, 1999), p. 196.

4) The Military Balance 1998/99에 의하면 총병력수는 중국이 약2,820,000명, 미국이 1,401,600명, 러시아가 1,159,000명, 인도가 1,175,000명, 북한이

2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실태 평가

이나 전자무기면에서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념·정치·군사 분야의 「강성대국」 주장이 과장된 것이고, 단순히 주민동원을 위한 구호에 불과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은 '98년 「강성대국」 건설 천명 이후 이념·정치·경제·사회·군사·대외·대남 등 모든 부문에서의 활동을 「강성대국」 건설과 연계시키고 있고,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김정일 정권은 대안세력으로부터 큰 도전을 받지 않고 건재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북한의 주장을 허장성세로만 치부하여 북한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한다면 대북정책 수립에 있어서 커다란 오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주장 배경, 사상·군사·정치 분야에서의 「강성대국」 건설 실태를 분석·평가하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 방법

가. 클라인(Cline)의 국력 평가 방법과 한계

어느 국가가 '강하다'고 주장했을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만일 객관적 평가방법만 있다면 특정한 국가의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는 쉽게 가려질 수 있을 것이다. 국력평가를 시도한 대표적인 학자는 클라인(Ray S. Cline)이다.⁵⁾ 그는 국력을

1,055,000명 등이다.

5) 이하 자세한 내용은 Ray S. Cline, *World Power Trends and U.S. Foreign Policy for the 1980s* (N.Y.: Westview Press, 1980), 崔圭莊 譯,

“냉정한 표현으로 전략·군사·경제 및 정치적 강점과 약점의 총화이다. 부분적으로는 군사력과 그 나라의 군사체제에 의해 국력이 결정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영토의 크기와 위치, 국경의 성격, 인구, 천연자원, 경제구조, 기술수준, 재정, 인종구성, 사회적 통합력, 정치과정과 정책결정의 안정도, 그리고 무형의 자산인 국민정신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주장했다.

클라인은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국력측정을 위한 공식을 제시하였다. 즉, $P_p = (C + E + M) \times (S + W)$ 이 그것이다. 영문자의 의미는 P_p (Perceived Power)=국력, C (Critical Mass: population, territory)=나라의 크기, E (Economic Capability)=경제력, M (Military Capability)=군사력, S (Strategic Purpose)=국가전략, W (Will to pursue national strategy)=국민의지 등을 나타낸다. 채점방식은 $P_p=1,000$ 점 만점으로서 $C=100$ 점, $E=200$ 점, $M=200$ 점, $S=1$ 점, $W=1$ 점 등이다. 1980년 이 공식을 통해 클라인은 소련을 1위로, 미국을 2위로 한국을 13위로, 북한을 31위로 평가했다. 그러나 클라인의 평가공식은 가중치의 자의적 적용이라는 중대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국가전략과 국민의지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자의적인 것이었다. 클라인 평가의 1위국인 소련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은 평가의 부적절성을 분명하게 해준다. 사실 지구상에는 이스라엘처럼 국토 크기나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강국’이 있을 수 있다.

국력에는 국가가 지니고 있는 영향력(influence)도 포함된다고 보았

「아메리카의 回復」(서울: 正宇社, 1981) 참조. 한편 북한의 국력이 남한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된 연구는 民族統一研究院, 「南北韓國力趨勢比較研究」(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와 동 연구원의 1993년 개정판이 있음. 또한 주체사상내면화와 관련해서는 김병로,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와 김성철 외,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이 있다.

4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실패 평가

을 때 북한의 영향력이 주변국 즉, 남한,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등에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도 '강국'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⁶⁾ 따라서 강대국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일반적으로 강대국과 약소국의 구별은 인구 수, 국토의 크기, 군사력, GNP, 국민의 단합력 등에 의해 수행되나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즉 이러한 요소들은 강대국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인구나 국토사이즈가 적고, 군사력이나 국민소득이 높지 않아도 이러한 조건을 갖춘 소위 '강대국'을 이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이 미국을 물리친 것이나 이스라엘이 아랍을 물리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국민의 정신력이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국가의 국민적 단합력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데에 있다. 즉 소위 '약소국'으로 인식된 국가가 '강대국'을 이길 수 있느냐 여부를 사전에 간파하기는 어렵고 '사후적'으로만 그것이 증명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북한의 강대국 판단 여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우리가 어떤 '자의적' 기준에 의해 북한을 '약소국'으로 규정한다 해도 '강대국'이 될 수 있고 '강대국'으로 규정한다해도 '약소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북한이 그들의 주장처럼 강대국인가 아니면 일부 서방학자들의 주장처럼 약소국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정은 어려운 것

6) 한델(Handel)은 국가를 5개 등급 즉, 초강대국(super powers), 강대국(great powers), 중위국(middle powers), 약소국(small powers), 최소국(mini states)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강대국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 단지 코헨(Keohane)이 내린 정의인 "체계에 대한 영향을 주는" 국가를 강대국이라 정의하였다. Michael Handel, *Weak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London: Frank Class and Company Limited, 1981. 김진호 역, 「약소국생존론」, (서울: 대왕사, 1995), pp. 23~32.

이 현실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모험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어차피 북한 국력 평가가 자의적 기준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다면 ‘알보다 큰코다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북한의 주장을 내재비판적 입장에서 국력평가를 해보자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가능하면 객관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나. 북한의 국력 평가방법

국력평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의 미비로 인해 북한이 「강성대국」인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standard) 설정과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자는 「강성대국」 건설 실태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한다. 첫째, 「사상강국」과 관련 주민들의 주체사상·집단주의·김일성 등에 대한 내면화 정도를 평가하고, 둘째, 「군사강국」과 관련 재래식 무기·대량살상무기의 개발·보유의 정도를 평가하며, 셋째, 「정치대국」과 관련 김정일의 강제력 장악정도와 주민들의 김정일에 대한 지지 여부 등을 평가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 건설이 어느정도 수준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장과 이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 가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재비판적인 접근법’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북한의 주의·주장을 1차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분야별 「강성대국」 건설 추이 분석을 위해 북한 통치자의 주장이 아닌 피치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탈북자 2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탈북자들은 남자 14명, 여자 6명이었고, 출신지는 함경북도 9명, 함경남도 4명, 평양 6명, 개성과 자강도 각각 1명이었으며 직업은 노동자 7명, 학생 4명, 예술선전대·사무원·전기수리공 각 2명, 군인·창고장·

6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실패 평가

요리사 각 1명 등이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강성대국」 건설 평가에 대한 기준이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가 싫어서 탈북한 사람들을 표본으로 채택했다는 점이다.

II. 「강성대국」론 내용 및 등장 배경

1. 「강성대국」론의 내용

북한은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을 앞둔 1998년 8월 22일 「로동신문」을 통해 ‘강성대국’론을 발표하였다. 강성대국론의 특징은 수령 김일성의 절대화, 김일성시대와 김정일시대의 절묘한 구분과 연계, 사상과 군대의 중요성 강조, 자력갱생적 경제강국 건설 강조 등으로 요약된다. 보다 자세히 분석한다면 첫째, 강성대국론은 ‘21세기 사회주의 강성대국,’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은 ‘주체의 사회주의 나라’로서 “착취와 억압, 가난과 무지, 침략과 약탈, 지배와 예속으로 얼룩진 지난 시대의 반동적 반인륜적 국가건설사에 종지부를 찍고 인민의 자주적 요구, 인류의 념원을 전면적으로 꽃피워 주는 영원한 이상국”을 의미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이상국은 ‘사상강국, 정치대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이 달성된 상태’이다.

둘째, 강성대국 목표달성 수단은 원칙적으로 전통적인 방법인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 정신,’ ‘주체와 자력갱생’이다. 그러나 자력갱생이 폐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용주의적 대외개방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북한은 195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주체를 강조하였고, 자력갱생 노선에 입각, 경제건설에 매진하였다. 주체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북한은 피나는 인내와 고난을 감내하여 왔고, 김일성 사후에는 고난극복을 위해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의 힘을 빌어 건설한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며 남의 덕에 잘 살아 보려는 인민처럼 어리석고 비굴한 민족은 없다.” “그 누

8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실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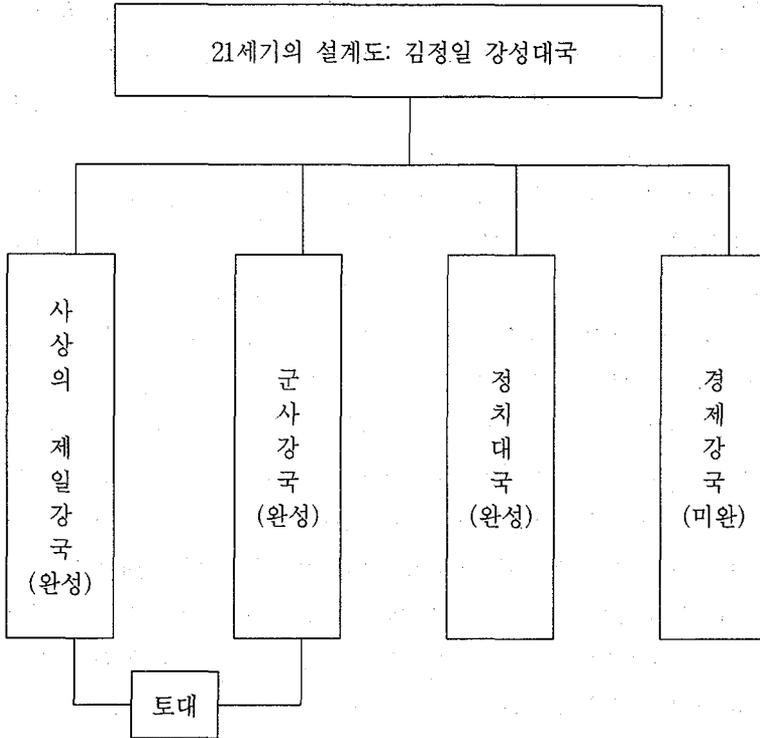
가 우리를 강하게 해주지 않으며 우리를 지켜 줄 수도 잘 살게 해 줄 수없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피로써 찾은 천리이며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인생교훈이다”는 주장이 강성대국론에 담지되어 있다.

강성대국론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표 1>, <그림 1>과 같다. 「로동신문」의 강성대국론은 서문과 (1), (2), (3)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강성대국」론의 내용

순서	내용
서문	새시대의 목표=강성대국
(1)	강성대국은 21세기의 설계도, 2단계 사회주의 혁명 완성과 3단계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영원한 이상국 건설
(2)	수령과 영도자의 존재가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 강성대국 발기자=김일성, 강성대국 완성자=김정일 강성대국 완성 수단=고난의 행군, 강행군, 자력갱생 대국건설 기본=사상과 군대 장악(총대철학)
(3)	사상의 제일강국, 정치대국, 군사강국을 토대로 김정일 중심 일심단결, 자력갱생에 의한 김정일 경제강국 완성

<그림 1> 「강성대국」의 구성



2. 지도자 개인적 배경

김정일은 키가 작고 체구도 적은 보잘 것 없는 외모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는 신체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⁷⁾ 김정일은 이를 감추기 위해 높은 구두를 신고 머리모양을

치켜 올리고 다닌다. 그는 작다는 이유로 남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큰소리로 말하고 ‘大人’처럼 행동한다.⁸⁾ 즉 김정일은 자신의 ‘작은 것’에 대한 콤플렉스를 숨기기 위해 ‘큰 것’을 선호한다. 유경호 텔, 주체사상탑, 주석궁, 인민대학습당, 개선문 등 대형건축물 축조가 그 증거들이다. 아울러 김정일은 ‘큰 인물’인 것 처럼 과장하기 위해 ‘광폭정치,’ ‘인덕정치’를 강조한다.⁹⁾

이러한 그의 행위를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의 욕구불만 해소방안의 하나로 보상(compensation)을 들고 있다.¹⁰⁾ 특히 아들러(A.Adler)는 보상을 신체적 열등감에 대한 반응으로 기술하고 있다.¹¹⁾ 보상심리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게 강하다.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경주한다. 신체적 결함에 의한 욕구불만은 대체로 사회생활을 통해 나타난다. 즉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보다 크고 높은 것을 추구한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1858-1919)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체적 결함을 보상받기 위한 노력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성공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보상노력의 성패는 당사자의 노력 정도는 물론 목표의 적절성

7) 최은희씨는 김정일이 자신을 “난쟁이 똥자루만하다”라고 표현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최은희·신상욱, 「조국은 저하늘 저멀리」(상) (서울: 행림출판, 1988), p. 36.

8) 조영환, 「매우 특별한 인물, 김정일」 (서울: 知識工作所, 1996), p. 166.

9)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는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북한은 1992년 8월 10일 「로동신문」 논설 ‘인덕정치가 실현되는 사회주의 만세’를 통해 최초로 이들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광폭정치는 출신성분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을 등용한다는 의미이고, 인덕정치는 김정일이 인민을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10) 장병림, 「사회심리학」 (서울: 박영사, 1980), pp. 159~160.

11) 장병림, 「정신분석」 (서울: 법문사, 1979), pp. 268~269.

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보상목표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인간의 노력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보상에 대한 평가는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즉, 어느 정도가 보상인가는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대학 입학이 보상일 수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상을 시도한 당사자가 설사 보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닌 허풍일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 의 경우 이념, 정치, 군사 부문에서의 「강성대국」 건설이 완료되었다는 주장이 허풍일 수도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상의 달성 여부는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즉 어떤 개인이나 국가가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달성했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면 그만이라는 점이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자기도취(narcissim)라고 명명한다.

한편 지도자의 개인적 심리는 국가경영에도 반영된다. 즉 개인의 열등감은 국가적 열등감으로 치환되고 이것은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도 나타난다.¹²⁾ 김정일이 「강성대국」 건설을 주창한 것도 공작새가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적을 물리치기 위해 날개짓을 세우듯이 북한이 대단한 힘과 역량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과시함으로써 ‘약소국’인 북한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일의 ‘巨物選好行爲’는 자신의 신체적 열등을 보상하기 위한 작위적 행동이라는 가설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강성대국」 건설 제시 목적이 ‘큰 것’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자신에 대한 냉소를 극복해 보기 위한 데 있을 수도

12) 지도자들의 열등의식이 어떤 보상기제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분석은 양성철, 「분단의 정치」(서울: 한울, 1987), p. 328 참조.

있다.

한편 지도자의 심리적 열등감은 상황을 잘못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즉 인식체계상 손상을 입은 지도자는 상대방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공격행위로만 인식, 보다 큰 대응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¹³⁾

3. 국내정치적 배경

북한경제는 김정일의 등장과 비슷한 시기인 1970년대 초반부터 쇠락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김정일은 쇠락해 가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3대혁명소조운동,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속도전, 대건축사업 등을 시도하였으나 경제회복에 실패하였다. 김정일의 경제정책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은 인민들의 물질생활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운동정책을 채택하였다.¹⁴⁾ 일반적으로 어떤 리더든지 피지배자들에 대한 동기 부여(motivation)를 통해 통치해간다. 그러나 김정일의 그것은 빈도수가 너무 많았다. 이 운동정책은 일정기간 동안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생산방식이다. 물론 이것은 의도한 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¹⁵⁾ 즉 ‘긴장의 일상화’로 인

13) 김용호, 「현대북한의교론」 (서울: 오름, 1996), pp. 396~405.

14) 1980.6: 「100일전투」, 1981.7: 「새기준새기록창조운동」, 1982.6: 「26호 선반 따라 배우는 모범기대 창조운동」, 1982.7: 「80년대속도창조운동」, 1984.1: 「혁명전사모범따라배우기운동」, 1984.8: 「8.3가내작업반창조운동」, 1985.6: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 1987.1: 「제3차 7개년계획 청년봉사상쟁취운동」, 1988.2: 「200일전투」, 1988.7: 「새200일전투」, 1989.6: 「경공업혁명 청년선봉대 쟁취운동」, 1990.1: 「90년대속도창조운동」, 1990.3: 「중산절약모범작업반운동」, 1993.5: 「우리식사회주의총진군속도운동」, 1994.1: 「근검절약운동」

15) 자세한 문제점들은 崔周煥, 「北韓經濟論」 (서울: 大旺社, 1992) 참조.

해 주민들의 경각심과 집중력은 저하되었고 당연히 생산성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김정일이 인민생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념비적 대건축물’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1979년 3월 김일성의 70회생일을 앞두고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건설을 제시한 것을 필두로 평양 모란봉경기장 증축, 인민대학습당·빙상관·평양제1백화점, 만경대유회장 등 ‘기념비적 대건축물’을 건설하였다. 아울러 그는 전국에 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선물관 등을 건설·보수하였다. 이러한 대건축물들의 건설은 김일성우상화에는 기여했을지 모르나 국고의 낭비를 가져 왔고 인민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김정일의 정치적 인기를 하락시키고 정치적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김정일은 ‘속도전식’ 경제발전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파괴,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였다. 김정일은 6개년계획(1971~1976)의 조기완수와 10대경제건설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전’을 전개하였다.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었다. 속도전은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인민들의 노동력에만 의존하여 발전을 시도하는 原始的 生産性向上 방식이었다. 속도전의 대표적인 사례는 ‘70일전투’이다. ‘70일전투’는 1974년 10월 9일 담보상태에 있었던 6개년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김정일이 제창한 사업이었다.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적인 결함외에 김정일의 경제정책 오적용으로 인한 경제침체는 김정일의 사후적 정통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특히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경제난 심화는 김정일의 권위를 더욱 약화시켰다. 그러나 김정일은 사회주의권 붕괴, 김일성 사망, 자연재해 등으로 약화된 경제난과 주민사기 저하 방지를 위해 ‘고난의 행군정신’, ‘한식술’론, ‘사회주의 총진군’, ‘강계의 혁명정신’ 등 다양한 주민동원 구

호를 제시하였으나 내부자원·에너지·주민열정 부족으로 인해 경제침체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김정일시대 개막을 앞두고 주민들의 심리적 전환을 통한 주민통합과 동원이 필요하게 된 북한은 새롭고 신선한 주민동원 정책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필요가 「강성대국」 건설 제시로 나타났을 것이다.

4. 국제정치적 배경

현실주의(realism)는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은 아니며 악한 일이나 재난을 야기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다.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나 홉스(Thomas Hobbes)처럼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욕심이 많고 침략적이며 따라서 인간과 인간사이 또는 사회집단간의 알력과 분쟁은 자연적인 현상이며 인간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시초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현실주의는 국제법의 확립과 국제기구의 설립으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할 수 있다는 이상주의(idealism)의 믿음에 회의적이다.¹⁶⁾ 국제관계에서는 분쟁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보고 국제관계를 분쟁과 권력투쟁이란 비관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북한도 철저히 정치현실주의적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을 기회만 있으면 북한을 ‘압살’하려는 ‘악의 원천’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미국의 대북 공격을 억지하려고 한다.

억지(deterrence)란 어떤 행동을 하려는 상대에게 그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되면 이쪽에서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자아내게 함으로써 원래의 생각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국제정

16)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Fifth Edition* (New York: Alfred A Knopf, 1948), pp. 3-15.

치에서 자주 언급되는 군사전략과 관련하여 보게 되면 억지란 군사행동을 생각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군사행동을 시작하면 상대에게 견디기 어려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그 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군사행동을 자제토록 하는 것이다. 억지이론은 억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데 핵무기의 등장으로 특히 각광을 받게 되었다. 핵무기는 그 엄청난 파괴력과 그 파괴력이 자아내는 공포 때문에 억지전략을 추구하는데 편리하고도 적절한 방편이 된다.

무력시위나 비슷한 방법으로 군사적 모험의 대가가 엄청나다는 것으로 보여 상대가 군사행동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동서양의 군사전략에 적용된 기본원칙이었다. 동물의 세계에서 억지전략이 통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양이와 개가 마주치게 되면 한쪽은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더 크게 보이려고 등을 치켜 올리며 발톱을 드러내는가 하면 다른 쪽은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고 소리내어 으르렁거리며 공격을 할 것 같이 덤비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억지의 성공여부는 행동을 하려는 쪽이 그 행동의 결과로 일어나는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기대계산(expectation calculation)에 달려있다. 최소한 억지이론에서는 그렇게 전제하고 있다. 이 기대계산은 행동을 했을 때 입은 피해와 이득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나 억지에 대한 계산은 물리학이나 공학의 세계에 있어서의 계산과는 달리 심리적 차원의 계산이다. 그것은 관련자들의 기행이나 개인 또는 집단의 인식차이 등을 감안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이 된다. 그러므로 억지는 궁극적으로는 미묘한 심리적 차원의 문제이다. 억지는 능력과 그 능력을 사용하겠다는 결의도의 정도에 좌우된다. 따라서 국력이 약한 국가도 강력한 군사력을 갖지 않고서도 국가목적의 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군사적 핸디캡을 보충할 수

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둔 것이 그 예이다.¹⁷⁾

또한 역지의 성공여부는 신빙성과 관련이 있다. 즉 너무 무모한 위협은 신빙성이 없다. 위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위협을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북한이 '강성대국'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신빙성 검토가 있어야 한다.

어떻든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심한 고립감에 휩싸여 왔고, 자본주의 국가들 특히, 미국으로 부터의 '공격' 위협을 느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이의 표현이 강성대국 건설 주장으로 나타난 것 같다. 아울러 김정일은 경제난으로 인한 김정일의 권위 약화를 「강성대국」이라는 공격적인 용어를 통해 내부통합을 이룩, 이를 대외에 과시함으로써 강대국의 대북압박을 회피해 보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시대를 맞아 북한은 김정일에 의해 이념·정치·군사적 「강성대국」이 달성되었음을 과시, 내부적으로 김정일의 정치적 정당성 획득과 주민통합을 이루고 이를 외부에 과시, 대북 압박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17) 이상의 논의는 김상준, 「국제정치이론 II」 (서울: 삼영사, 1980), pp. 99~146 참조.

Ⅲ. 「사상강국」¹⁸⁾ 평가: 주체사상의 내면화 정도

1. 북한의 사상정책

북한의 중심사상은 주체사상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내면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정수는 ‘혁명적 수령관’이다. 결국 북한의 사상정책은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양양시키는 데에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수령론으로 대변되는 주체사상 교양을 위해 학교에서의 주체사상교육은 물론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발간, 주체사상연구소 운영, 해외에서의 선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첫째, 학교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과 교시」가 강의되어 진다. 이를 통해서 주체사상 창시자인 김일성과 그의 후계자인 김정일에 대한 위대성이 교육된다. 이외에 「김일성 선집, 저작집」,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등이 교육되고, 방송을 통해 「김정일사상」이 강의된다. 간부들에 대해서는 김일성 고급당 학교, 공산대학, 인민경제대학 등에서 강도높은 주체사상 강의를 실시된다. 아울러 이들은 토요일 학습이나 수요강연 등에 참여, 김일성 사상 학습을 받는다.

둘째, 김일성 우상화 건축물에 대한 참관이 이루어 진다. 북한 주민들은 만경대 김일성 생가, 평양학생소년궁전, 개성·후창·삼지연 등에 설치된 소년단야영장, 조국전쟁기념관, 혁명전적지 및 사적지, 김일성 동상 등에 대한 탐방을 통해 수령에 대한 존경심을 키우고 김일성을 ‘아버이’로 칭송하는 습관을 기른다.

18) 「강성대국」론에서 주장되는 ‘사상강국’은 ‘김정일사상’으로 무장된 상태를 의미한다. ‘김정일 사상’은 ‘애국의 사상·애민의 사상·애족의 사상’이다. 그러나 이것도 주체사상의 범주에 지나지 않는다. 「로동신문」, 1998.11.30.

셋째, 영화, 연극, 무용, 음악, 방송, 출판물 등을 통해 사상교육이 이루어 진다. 김일성 항일무장투쟁 경험, 자본주의반대 사건, 개인보다는 김일성을 위하는 행동 등이 영화나 노래로 만들어져 보급되고 항상 보고 부르도록 강요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혁명성, 계급성 등이 가미되지 않은 예술·문학 작품은 생산될 수가 없다. 이런 배경에서 김정일은 ‘종차론’을 강조하였다. 물론 최근 중국과의 교류협력 증대로 인해 중국이나 남한가요가 불려지고는 있지만 대중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2. 주체사상에 대한 주민의 이해

가. 주체사상 심화과정

북한이 ‘사상강국’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다는 자신감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주체사상은 북한주민이면 누구나 배우고 실천해야되는 ‘聖書’이다. 특히 주체사상이 수령의 지시나 명령을 무조건 복종하는 ‘혁명적 수령관’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면 이는 주민들이 주체사상을 준봉(confirmity) 또는 중심가치체계(central value system)로 삼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을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북한 주민들이 주체사상을 철저히 신봉하고 있다면 다른 사상 즉, 자본주의사상의 침투가 어렵게 될 것이고 소위 ‘사상강국’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물론 북한이 여타의 사상유입을 철저히 봉쇄한 상태 즉, 북한 주민들이 다른 사상과 비교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주체사상에 대한 내면화 정도는 별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북한주민의 주체사상에 대한 내면화 정도는 이스라엘처럼 모든 사조가 자유로이 유입되는 상황에서도 주민들 대부분이 시오니즘이나 기독교사를 신봉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주나 자본가들에 대한 증오심을 토양으로 성장해 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자주와 ‘혁명적 수령관’을 기저로 한 주체사상의 위상은 크게 흔들릴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주체사상은 어떻게 심화되어 왔는가? 김정일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주체사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김정일이 1974년 당내에서 후계자로 선출된 이후 가장 역점을 두었던 목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구체적 내용은 첫째, 전민민을 김일성주의자로 만드는 것이고, 둘째, 사회개조를 통해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우선시되는 것은 전주민을 김일성주의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북한이 주장하는 김일성주의는 한마디로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체계’이다. 곧 김일성이 ‘교시’한 사상과 그의 실천 방법이였다. 이것은 김일성이 제시한 주체사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군 등 사회전반에 확산시켜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김정일 유일지도체계 확립’을 위한 정치적 행동이였다.¹⁹⁾ 김정일은 아버지인 김일성의 절대화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공고화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였다.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피선된 후인 1974년 2월 19일 당선전일꾼강습회에서 행한 결론인 「온사회를 김일성주의

19) 교육도서출판사 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혁명력사」, (고등중학교 제6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0), p. 8.

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를 통해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선언('2.19선언')하였다. 물론 김정일은 이미 1970년 5월 김일성 혁명사상의 김일성주의화를 표방한 바 있었고, 이후 1971년 가을과 1973년 여름 등에도 김일성주의화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었다. 어쨌든 김정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²⁰라고 결론지음으로써 그의 후계자 내정 이후의 첫 과업이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사업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김일성이 사망한 현재도 제1의 국가목표로 설정되어 있고 따라서 이 사업은 김정일정권 하에서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훈’이나 ‘神託’에 의해서만 통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2.19선언’에서 김일성주의자의 기본적인 품성을 ‘수령에 대한 절대화, 신조화, 무조건성의 원칙’ 등의 준수라고 말하고 있다.²¹ 즉 김정일은 수령에 대한 충성이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이라고 규정하여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북한주민의 최고덕목으로 승화시켰다. 첫째, ‘절대화’는 ‘대를 이어’ 수령을 모시고 수령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신조하에 수령을 위해 목숨도 버린다는 것이고, 둘째, ‘신조화’는 수령의 사상과 교시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며, 셋째, ‘무조건성의 원칙’은 수령의 교시를 지상의 명령으로 따르고 교서관철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고 어떤 구실이나 이유를 붙임이 없이 교시를 관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인민들은 수

20)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74.2.19),”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3.

21)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74.2.19),”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15.

령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초개와 같이 버려야 한다고 교육받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주의화’ 사업의 요체는 인간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끊임없는 세뇌를 통해 인간의 정신을 개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김정일은 자본주의국가에서처럼 물질적 유인을 통한 생산성 향상보다는 인간을 이타적으로 개조하여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의도에서 인간의 정신개조에 매진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그는 수도승과 같은 내핍생활의 미화 즉, 물욕은 죄악이라는 의식화를 통해 물질부족으로 야기된 인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김정일은 상시로 수령의 교시를 암송하도록 하고 「유일사상체계확립10대원칙」²²⁾을 외우도록 하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교시암송과 그 실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2) 「10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배워 공산주의적품성과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나가야 한다.”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1974.4.14),”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p. 101~124.

그런데 이 「10대원칙」은 이미 김영주가 조직비서시절에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중앙일보사, 「金正日」, p. 96. 이와 관련 김정일은 1974년 2월 19일 문건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에서 “최근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수립을 위한 10대원칙이라는 말도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고”라는 말을 하여 「10대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음을 개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0대원칙」이 이미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1974.2.19),”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13.

‘총화’ 제도를 강화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주의화’를 위해 먼저 간부들이 김일성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주의자가 된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인민들을 김일성주의자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선전선동부원들이 김일성주의의 요체를 먼저 파악·숙지하고 현실성있는 선전수단을 개발, 하급관료와 인민들의 사상교양을 높이도록 강조하고 있다.²³⁾ 여기에서 중요시되는 방법이 ‘혁명적 균중로선’²⁴⁾이다.

김정일은 사상개조의 수단으로 영화, 가극 등을 이용하였다. 김정일은 영화예술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⁵⁾ 그는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부친인 김일성과 김일성의 동료들이 빨치산시절 체험했던 내용들을 극화 내지는 영화화하여 관료나 인민들이 그대로 답습하도록 하였다. 즉 김정일은 이러한 매체를 통해 관료나 인민들이 항상 빨치산시대의 의식상태를 보유하도록 강요하였다.

한편 김정일은 1980년 6차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피선되었다. 그는 1980년 12월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를 비롯한 몇가지 문헌을 발표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6차 당대회 보고를 통해 김일성주의화의 완성을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의화 관철을 위해서는 모든 주민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령이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

23) 김정일은 당사상사업이 아래로 잘 침투되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하고 그 원인을 당관료들의 형식주의로 돌리고 있다. 위의 책, p. 37.

24) 북한의 혁명적 균중노선에 대해서는 백두연구소 편, 「북한의 혁명적 균중노선」(서울: 백두, 1989) 참조.

25) 자세한 내용은 이우영, “김정일의 문예관 연구,” 「統一研究論叢」(서울: 민족統一研究院, 1993년 2권 1호) 참조.

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정확히 알려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높은 은덕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인식시켜야 한다”²⁶⁾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김정일은 1981년 4월 「도, 시, 군 당위원회앞에 나서는 과업」을 발표하고 “당의 기초를 쌓는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에 대한 충성심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²⁷⁾라고 말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주의를 대중화시키기 위해 주체사상을 보다 체계화하였다. 즉 김정일은 1982년 3월 김일성 70회생일 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서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 주체사상전전의 전환점을 이룩하였다. 그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제시되었던 주체사상을 집대성하였다. 그 내용은 주체사상의 창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주체사상의 역사적 의의 등이었다. 이후 이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총서」라는 이름으로 10권의 책이 세부화되어 출판되었다.

김정일의 작품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986년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김일성주의를 ‘聖書’화하였다는 점이다. 이 담화의 의미는 1982년까지 막연하게 제시되었던 사회정치적 생명 문제를 체계화시켰다는 점과 ‘우리민족제일주의’를 표방하였다는 점이다.²⁸⁾ 특히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정점이었다. 즉 김일성은 생명을 창조하는 신이 된 것이다. 김정일은 여기에서 사회를 수령, 당, 대중으로 구성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라 규정하고 사회정치적 생명체도 개인처럼

26) 교육도서출판사 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혁명력사」, pp. 61~62.

27) 위의 책, p. 64.

28) 자세한 내용은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86.7.15),”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pp. 460~467.

생명이 있는 바, 그것이 곧 사회정치적 생명이고 이 생명의 중심은 최고뇌수인 수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민들은 사회정치적 생명의 중심인 수령을 믿고 의지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운명체인 수령, 당, 대중은 상호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김정일은 1991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발표, 인민대중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김정일이 인민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이유는 첫째, 1989년부터 시작된 사회주의권의 붕괴과정에서 인민들의 역할이 컸기때문에 이들에 대한 무마책이었고, 둘째, 김정일이 “인민대중이 자주적 권리를 행사하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결심과 판단에 따라 자기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처리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듯이 식량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개인이 ‘자주적으로’ 해결토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 주체사상의 내면화 정도

그렇다면 북한주민들은 주체사상을 어느 정도로 내면화하고 있을까? 통일연구원의 김병로박사는 1994년 8명의 귀순자를 상대로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주체사상 내면화 정도를 고찰해 본다.²⁹⁾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인간중심의 철학은 주체사상이 내세우는 기본 전제이다. 이러한 주체철학의 내면화에 대해 ‘무용지물’이라고 대답한 한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부분적

29) 이 부분은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앞의 책에서 원용한 것임.

이긴 하나 현재의 상태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였다. 생활속에 녹아있어 의식하지 못한다거나 상당수준이라고 평가하였고 1986년부터 이론화되기 시작한 민족제일주의는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체철학의 내면화에는 학교의 정치사회화 교육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응답자 중 한사람은 면접자의 요구대로 백분율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다른 응답자의 내용과도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그는 인간중심의 주체철학을 ‘신봉’하고 ‘믿고’ 있는 북한사람들은 전체주민의 약 70~75% 정도가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물론 이들이 주체철학을 얼마나 열렬하게 믿고 있는가 하는 정도는 다르며, 크게 3등분 할 수 있다. 내면화의 정도가 완전하고 철저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들은 소위 “주체의 요구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통칭된다)은 전체주민의 약 25%로 보이며, “믿기는 믿으나”(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으나) 의심도 하고 있는 중간부류는 25~30% 정도, 그리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체사상의 ‘교재’가 없이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즉 내면화의 정도가 약한 사람이 20%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인간중심 철학의 내면화 정도가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주체철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지적 능력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인식수준이 높고 주체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의 기회도 많아 이해가 빠르고 자기 지식의 체계 속에 흡수하는 능력이 높아 내면화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년배 집단 중 대학을 진학하는 14%의 사람들은 비교적 주체철학을 빨리 이해한다. 이들은 주체사상이 이미 자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가 없이도 자유롭게, 그리고 설득력있게 주체철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다.

어떤 응답자는 내면화되어 있지 않은 25~30%도 주체사상의 철학

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이들 중에는 적지 않은 포섭계층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포섭계층인 것은 아니다. 포섭계층 중에도 주체사상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많다. 내면화되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는 북한체제 자체에 불만을 품은 일부 포섭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되지만 그보다는 주체철학과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류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부 노년층과 저학력층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주체철학에 대한 인식능력이 없고 더구나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한 응답자의 대답처럼 주체철학은 북한주민들의 의식 속에 아무런 장애 없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궁극적인 가치관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9년도에 필자가 탈북자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체사상에 대한 신봉 정도는 역시 높았다.³⁰⁾ 즉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주체사상의 원리에 따라 생활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주체사상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70%정도였다.

<표 3> 주체사상 실천정도

단위: 인원수(명)

철저히 지킴	대체로 지킴	대체로 안지킴	철저히 안지킴
7	7	5	1

30) 이와 관련 민주통일연구원(현재는 통일연구원)의 김성철 박사팀이 1996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은 공식적으로는 주체사상을 수용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수용하지 않거나 선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p. 34.

3. 수령에 대한 태도

가. 수령의 북한내 위상

김일성 수령은 사망하였지만 아직까지도³¹⁾ 북한은 수령을 정점으로 피라밋식 지배구조를 이루고 있는 독재체제이다. 북한의 수령은 왕조시대의 왕을 능가하는 절대권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수령이나 수령의 후계자가 되지 않고는 누구도 인민을 통치할 수가 없고 누구나 수령의 ‘교시’에 의해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 물론 수령은 김일성이다.

김일성이 ‘수령’이 된 이유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항일빨치산 경력, 둘째, 사회주의적 개혁과 정부수립, 셋째, 한국전쟁에서의 ‘승리’ 등이다.³²⁾ 우선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활동여부는 이제 그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보인다.³³⁾ 물론 그가 북한의 선전처럼 위대한 혁명가는 아니었다는 것이 정설로 되고 있다.³⁴⁾ 어쨌든 오늘날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빨치산활동을 그에 대한 최대의 찬사근거로 삼고 있다.³⁵⁾

31) 북한은 비록 수령 김일성이 사망하였지만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 목사들이 축도시 하나님에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임을 강조하는 것과 유사하다.

32) 「중앙방송」, 1994.8.8.

33) 양성철 교수는 “비록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도 김일성의 항일무장게릴라투쟁 경력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성철, 「분단의 정치」 (서울: 한울, 1987), p. 137.

34) Suh Dae Sook, *Kim Il Sun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 31.

35) 북한은 그들의 주체사관의 출발시점을 항일무장투쟁에서 찾고 있다. 북한의 김일성의 혁명활동이 1926년 화성의숙시절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13.

김일성은 한국전쟁 기간에 최초로 ‘수령’이라는 호칭을 받기 시작하였다. 즉 1952년 12월 15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3기 제5차 전원회의때 김일성의 연설 후 장내에는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게 영광을 드린다”는 환호성이 퍼졌다.³⁶⁾ 김일성에 대한 수령화 작업은 이후 본격화되었고 당시의 연안파, 소련파 등은 이것을 비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비난하였으나, 이것은 김일성이 이들에 대해 대수청을 하도록 하는 빌미만 제공했을 뿐이었다. 즉 김일성 개인에 대한 우상화반대가 1956년 소위 ‘8월 종파사건’을 야기시켰고 김일성의 일방적 승리는 그의 개인우상화를 강화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김일성의 성공적인 종파적결 이후 축제분위기에서 개최된 1961년 4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의 수령화작업이 보다 가시화되기 시작하였고 1967년 7월부터 김일성은 공식적으로 ‘위대한 수령’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³⁷⁾ 1967년 7월 당의 이론지인 「근로자」에서는 수령론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혁명의 승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추진성과 여하는 당의 령도적 역할에 의존하고 당의 령도는 수령의 역할에 의해 좌우된다. 수령은 로동계급 앞에 정확한 투쟁로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혁명력량을 확고히 결속시켜 그들을 조직동원하고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맡는다”³⁸⁾고 이 논문은 주장하고 있다. 1970년대 들어서부터 수령은 최고의 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라는 개념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북한은 1970년 5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을 맑스-레닌주의와 함께 통치이념으로 ‘확고부동하게’ 정식화³⁹⁾하고 1972년에는 개헌을

36) 김일성, “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김일성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p. 337.

37) 최 성, 「북한정치사」 (서울: 풀빛, 1997), p. 182.

38) 엄기형, “항일유격대원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 「근로자」 (1967.7), p. 9.

통해 수령을 제도화하여 주석제를 신설했다.⁴⁰⁾ 이것은 김일성이 정신적·제도적 측면에서 유일지배체제 구축을 완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김정일 후계체제 확보를 위한 전주곡이었다.

1973년 사실상 후계자가 된 김정일이 1974년 2월부터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시도하면서 수령의 유일적 지배체제는 후계자의 유일적 지배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후계자의 유일적 지배체제의 완성은 1980년 김정일의 후계자 공식화로 이어졌고 당규약 개정을 통해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⁴¹⁾는 것을 천명하도록 하였다.

수령론은 1986년 수령·당·인민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이 생명체의 뇌수는 수령이 된다는 사회정치적생명체론⁴²⁾으로 전환되면서 수령은 완전한 의미에서 신이 되었고 수령화작업도 마무리 되었다. 즉 수령은 ‘神’이 되었고 후계자는 ‘神의 자’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체제는 수령의 유일적 지배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을 통치하는 누구도 수령의 권위를 획득하지 못하면 최고통치권자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의 수령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수령은 혁명과 건설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39)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336. 김일성은 여기에서 “우리는 맑스-레닌주의 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하여”라고 말하였다.

40) 주석제에 관한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7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3), pp. 5~6. 헌법 제89~99조 참조.

41) 1980년 당규약 전문 참조. 梁性喆, 「北韓政治研究」, (서울: 博英社, 1993), p. 560.

42) 이것은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에서 그 개념이 도출되기 시작하였으나 그것이 체계화되어진 것은 1986년 7월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였다.

역할을 수행하는 당과 혁명의 탁월한 영도자”이고 “근로인민대중의 최고녀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⁴³⁾이다. 북한은 “수령이 인민대중의 최고녀수로 되는 것은 수령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⁴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리더는 누구나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해 리더쉽을 발휘한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북한의 수령은 일반론적인 리더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점이다. 즉 북한은 수령이 인류역사에서 가끔 찾아보는 특출한 개인과 완전히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수령은 인민대중에게 정치적 생명을 창조해 주고 그것을 끝까지 신장시켜 주기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은 “인민대중의 최고녀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서의 수령의 지위, 인민대중속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최고의 영도적 지위는 절대적이고, 수령은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⁴⁵⁾ 함으로 인민대중은 절대성, 신성성을 보유한 수령을 무비판적으로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 수령에 대한 내면화

김병로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김일성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는 “열렬하며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북한주민의 60~70% 이상은 김일성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으며 많게

43) 김민·한봉서 공저,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9: 령도체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9.

44)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376.(이하 「철학사전」으로 표기)

45) 「철학사전」, p. 377.

는 99%의 북한주민이 김일성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김일성 숭배의 한 실례로 1990년 11월 강계시 폭파사건으로 주민들이 타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 주민의 70%정도가 김일성초상화를 메고 이동하였다고 한다. 이는 물론 남들에게 보이려고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휴일에 초상화를 닦는다든가 김일성동상에 나가 꽃바구니를 놓고 오는 충성심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주민의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은 김일성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충성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북한주민들은 김일성이 모래로 쌀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대로 믿을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면서도 수령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고, 김일성에 대해 죽는다는 표현은 불경한 일로서 있을 수 없으며,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머리가 희어지셨다”라고 표현하는 등 가히 김일성종교국가, 김일성왕조국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을 이처럼 지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항일운동을 주도했으며 일제를 타도하고 민족해방을 성취시켰다는 것이며, 둘째는 한국전쟁에서 미국과 대결하여 승리했다는 것이고, 셋째는 전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업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항일투쟁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조국을 해방시켰다는 내용과 한국전쟁에서 미국과 싸워 이겼다는 두 가지 사실, 즉 일본과 미국이라는 급세대의 거대한 두 제국주의 국가를 물리친 영웅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주민들은 김일성이 우리민족의 자존심을 살려 놓았다는 식으로 믿고 있다.

한편 김일성의 ‘인간적’ 측면도 숭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김일성이 현지도도시 농민들과 숙식을 같이 한다든가 농민들의 고충을 같이하며 아픈사람과 같이 울고 슬피한다는 인간적인 포용력이 강조되기도 한다. 또한 자기 부모는 돈 몇푼이 없어서 자기에게 조그만 것도 못해주는데 김일성은 모든 것을 해주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한다는 등의 얘기를 신뢰의 근거로 꼽고 있었다. 어떤 귀순자는 북한체제나 사회가 싫어 남한에 왔으나 김일성에 대해서는 나쁜 감정은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였다. 특히 김일성이 사망한 후 북한인민들이 보여준 ‘광신도적’ 태도는 그것이 비록 동원과 공포에 의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의 세뇌의 결과로서 어느 정도는 존경심의 발로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인민들은 김일성에 대해 내면화 정도는 아니라도 동일시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집단주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가. 집단주의의 북한내 위상

1998년에 개정된 ‘김일성 헌법’에는 1992년 헌법 제82조에 있었던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이다’라는 조항이 삭제⁴⁶⁾되었지만 집단주의는 여전히 북한주민의 생활규범으로 남아 있다.⁴⁷⁾ 집단주의는 공산주의 이념에서 중심되는 가치이고 사회주의교육의 핵심요

46) ‘김일성헌법’ 제81조 참조.

47) 북한은 '99.11.3 개최된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대회’에서 “천리마대진군 선구자들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온 사회의 사회주의적 생활원칙 집단주의적 생활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며..”라고 말하여 아직도 집단주의가 주민의 생활원칙임을 강조하였다. 『중앙방송』, 1999.11.3.

소이다. 집단주의적 가치지향의 규범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집단주의는 개인이기주의, 약육강식, 반목, 질시, 공명심, 출세, 사기, 협잡, 횡령, 개인의 안일, 향락 등을 배격하고 집단이익을 절대우선시하는 사회주의적 지향이다. 둘째, 집단주의는 노동계급의 가장 본질적인 특색의 하나로서 수령, 혁명, 조직과 집단을 위해 몸바쳐 일하는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이다. 셋째, 집단주의는 전체사회를 혁명화·노동계급화하기 위한 정신이다. 특히 인테리를 혁명화하는 일이 선차적 과제가 된다. 넷째, 집단주의는 주체사상과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집약된다. 다섯째, 집단주의는 주민생활의 조직화를 위한 규범이다. 즉 집단주의는 국민의 의무로서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우는 것이다.⁴⁸⁾

나. 집단주의에 대한 지지도

김병로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집단주의 생활방식을 좋게 생각하고 선호하는 북한주민, 즉 집단주의적 생활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비율은 주체철학의 내면화 정도에 비해 약간 낮게 평가되었다. 주체철학은 사람 중심으로 사고한다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높을 수 있지만, 집단주의 생활원리는 사람을 조직에 묶어 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배치되어 철학적 측면의 내면화보다는 약간 낮을 수 밖에 없다. 집단주의 가치에 대한 내면화 정도가 이처럼 낮아지는 이유는 개인의 이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적 인간개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48) 이은숙,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법문사, 1993), pp.262~266.

응답자들은 북한주민들이 집단주의의 비효율성 혹은 인간의 본능과 배치된다는 점을 감지하면서도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적 특성 내지는 기득권층을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한 응답자는 주체철학의 내면화보다 약간 떨어진 60~65% 정도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집단주의 가치가 내면화되는 중요한 근거로는 체제문제와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자본주의는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고용자로 되어 있지만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공유하기 때문에 노동자 집단이 곧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집단주의적 가치는 조직운영에서 개인의 이기심을 억제하기 위한 미시적 논리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가와 체제로 이어져 수령론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집단주의적 가치를 사회적 규범으로 내걸고 있는 북한은 현재 지방주의적 요소가 거의 사라졌을 정도로 집단주의가 실생활에 흡수되어 있다. 함경도가 빨치산 운동이 있었던 이유로 사회경제적 위치가 다른 지방보다 높고 자부심도 있지만 이것이 사회적 영향력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평양시의 경우는 특히 조직생활을 잘하는 주민들만 이주시켰기 때문에 지연에 기초한 지방주의는 의미가 없다. 심지어는 개인의 자살도 집단주의적 관점에서 '민족반역죄'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은 중세 신정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집체주의적 현상으로 매우 흥미롭다.

북한의 사회조직과 경제생활은 대중운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개인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사회경제조직과 규범을 파괴하는 나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주변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는다. 귀순자들은 남한생활에서 처음 경험하는 '개인주의'는 분명히 편하고 좋긴 하지만 처음엔 "이러다가 한

방에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과 강한 허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개인주의의 단점만을 편향적으로 교육받은 북한주민은 집단주의의 장점을 개인주의의 단점과 비교하면서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주의 생활방식이 자본주의의 개인주의적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경우 집단주의적 생활가치를 고집할 사람의 비율은 현재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응답자는 이 경우 10% 내지 15%가 낮아진 5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귀순자들은 북한주민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집단생활의 의식과 습성이 몸에 배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 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개인주의적 가치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주의적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허용될 경우 이 가치를 받아들이는 부류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류층과 중류층은 사회적으로 지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이를 선뜻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산층 이하 하층민들은 개인주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들의 행위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단주의적 가치의 내면화는 다른 집단에서보다 쉽게 와해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집단주의의 비효율성과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개적인 토론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지식인 계층에 국한되어 있다. 일반주민들은 먹고 사는 생활고에 쫓겨 집단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할 여유가 거의 없지만, 실생활을 보면 협동농장에서는 함부로 낭비하는 비료를 자기 텃밭에서는 매우 아껴쓰는

등 개인주의적 생활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태도는 필자의 조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을 중요시했다고 표시한 사람은 30%에 불과했다.⁴⁹⁾ 그 이유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개인차원의 의식주 해결 강조와 심각한 물자부족의 실제상황에서의 몰가치적 개인행동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4> 집단의 중요도

단위: 인원수(명)

집단을 매우 중요시	집단을 약간 중요시	나를 약간 중요시	나를 훨씬 중요시
5	1	4	10

5. 소결

북한의 「사상강국」 건설 실태는 위로부터의 철저한 세뇌교육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주’의 고수라는 명분을 내걸고 등장한 주체사상은 ‘혁명적 수령관’으로 전변되면서 개인우상화 착근을 위한 ‘허위의식’으로 변하였다. 주민들을 김일성 개인에 대한 ‘충성동이,’ ‘효성동이’로 개조시키기 위한 각종 세뇌교육은 주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만이 유일한 지도자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거부는 곧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단순논리가 통하게 되었다. 이러한

49) 이러한 현상은 1996년의 조사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앞의 책, pp. 35~38.

화석화된 인식체계(fossilized perception system)는 수령이외의 대안세력 등장을 철저히 봉쇄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주요한 기본가치인 집단주의적 가치는 점점 소멸해 가는 것이 발견되었다. 비록 귀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이기는 하지만 집단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풍조가 북한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특히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개인주의적 사조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장차 김정일 개인에 대한 불복종은 물론 사회주의체제 자체에 대한 거부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점이다.

북한의 「사상강국」 건설 주장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비록 북한내에 「사상강국」이 건설되었다 할지라도 매우 불평등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즉 북한은 외부사조의 유입을 철저히 봉쇄하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통해 주체사상이나 수령론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만일 외부사조의 유입이 확대된다면 주체사상의 정수인 수령론이 일거에 붕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은 이것을 우려하여 개방을 거부하고 ‘황색바람’ 차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사조의 유입은 필연적일 것이고 언젠가는 자유주의와의 한판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 경쟁에서 주체사상이나 수령론이 승리한다는 보장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 「사상강국」 북한의 최대 약점이다.

IV. 「군사강국」 평가: 유·무형의 군사력⁵⁰⁾

북한이 군사강국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105만명에 이르는 대군과 각종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미사일·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보유, 군사시설의 요새화 등 복합적인 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군사강국은 첨단 전자장비와 군사위성까지 보유한 상태가 진정한 의미의 강국이다. 물론 이것도 상대적이다. 즉 러시아나 중국이 군사강국이라는 하지만 미국과 비교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사력은 타국가와 비교평가되어야 한다.

군사력 평가방법에는 단순개수비교법, 3:1비교법, 랜체스터 모델, 엠스타인 모델 등이 있다. 첫째, 단순개수 비교법은 육군 몇 명, 탱크 몇 대, 항공기 몇 대, 함정 몇 척 등 2개국간 보유숫자를 상호비교함으로써 군사력의 우열을 가리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무기의 질을 고려하지 않아 적실성이 떨어지는 비교방법이다. 둘째, 3:1법칙은 양측을 공격자와 방어자로 나누고 공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격자가 방어자보다 3배정도의 전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방법 또한 무기의 질이나 운용자의 능력을 도외시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비교방법이다. 셋째, 랜체스터 모델은 한 측의 손실율이 다른 측의 전력수준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랜체스터 등식은 상대의 손실율을 계산하는데 무력의 사이즈, 부대효과, 시간 등 3요소를 합산한다. 그 이 모델 역시 무력사이즈만 강조되고 화력효과는 무시되며, 부대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시간의 장단과 손실의 다과와는

50) 본 장은 황진환, 「한국의 안보와 군비통제」 (서울: 鳳鳴, 1998), pp. 97~121에서 주로 인용됨.

깊은 관련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한계를 노정하였다. 넷째, 엠스타인 모델은 랜체스터 모델에서 간과된 지상전에서의 근접항공지원의 효과와 손실율의 효과를 고려하였다. 즉 항공전력이 지상군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로서 양측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참여 비행기 대수와 각 비행기의 일일 출격회수가 전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델 또한 단순히 비행기 대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우세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⁵¹⁾

1. 북한의 군사정책

어느 나라나 군사정책의 목적은 국가의 안전보장 유지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정책은 약간 특이하다. 그 이유는 북한의 군사정책 목적은 국가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남조선 해방’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주 국방 정책, 국방·경제병진 정책, 전사회의 병영화 정책, 유격전대비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군사정책 실천을 위해 북한은 ‘4대군사로선’을 군사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첫째, 자주국방 정책이다. 북한은 1955년부터 주체를 표방하기 시작하였고 군사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1958년 중국인민해방군의 철수로 인해 발생한 군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1959년 1월 ‘로농적위대’를 창설함으로써 자주적 군사정책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61년 남한에서 군사에 정통한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물론 남한의 군사정권

51) 문정인·현인택, “동북아의 재래식 군사력 평가: 방법, 핵심군사력, 그리고 비대칭적 균형,” 문정인 외, 「동북아 재래식 군사력 평가」 (서울: 홍문당, 1999), pp. 18~25.

등장이 결정적 이유는 아니었지만 북한은 1962년 12월 10~14일까지 개최된 당중앙위 제4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국방에서의 자위’를 천명하고 ‘4대군사노선’을 채택하였다.⁵²⁾ 이후 북한의 국방비 및 군사력은 대폭 증가되기 시작하였고 부수적으로 군부의 영향력도 그만큼 커졌다. 군부 영향력 증대는 군사비 증액을 낳았고 그 결과는 군사부문의 과분수적 비대를 낳았다. 또한 군부의 비대화는 군병력 숫자만 증대시킴으로써 인건비가 과대지출되는 구조가 형성,⁵³⁾ ‘전군현대화’ 논의와는 달리 군무기의 노후화를 초래하였다. 물론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군우대정책을 통해 소련으로부터 MIG-21 전투기, SU-7 전폭기, SA-2 대공미사일, W급 잠수함, T-54 전차 등 현대화된 병기를 도입함으로써 무기의 노후화를 상당정도 보완하고 공세적인 무기체계를 수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6.15 서해사태’에서 보았듯이 전반적으로 북한무기는 노후화된 것이 사실이다.

둘째, 국방·경제병진 정책이다. 북한은 1962년 이후 점진적으로 진행시켜온 국방·경제 병진정책을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의를 통해 정식화하였다. 이로 인해 1967년까지 완성키로 하였던 제1차 7개년계획이 3년간 연장되었다. 북한이 국방·경제병진정책을 채택한 배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주된 배경은 월남전의 격화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⁴⁾ 어떻든 이 정책으로 인해 북한 군사비는 엄청나게 증대된 반면, 인민경제는 침체해 갔다. 이 과정에서 당료과와 군부간의 알력이 발생하였고 이것은 1967년 박금철, 리효

52) 엄밀한 의미에서 ‘4대군사노선’이 확정된 것은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의에서였다. 함택영, “북한의 사회주의경제와 국방건설,”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국동문제연구소, 1992), p. 93.

53) 함택영 교수는 이를 ‘노동집약적’(병력) 전력증강이라고 주장한다. 함택영, 앞의 글, p. 108.

54) 함택영, 앞의 글, p. 91.

순, 김도만 등의 숙청으로 귀결되었다. 또한 군의 득세는 1968년 1.21 사태, 미정보함 프에블로호 납치사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후 국방비로의 과도한 예산투입은 단기적으로는 군수산업 발전에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민경제를 피폐화시킴으로써 국방분야를 취약하게 만든 원인이 되고 있다(<표 5> 참조).⁵⁵⁾ 물론 이로 인해 군 현대화가 진행되었고 동북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화생방 무기, 미사일무기 개발을 달성, 대외 협상력을 제고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셋째, 전사회의 병영화 정책이다. 전주민을 戰士化시키려는 북한지도부의 의도는 사회전체를 군조직화하였다. 노동적위대를 비롯한 붉은청년근위대, 교도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소년단 등 다양한 준군사조직이 등장하였고 모든 주민들은 평시에도 일정기간 군사훈련을 받고 전투식량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의 병영화는 ‘긴장의 일상화’를 초래함으로써 주민들의 경각심을 약화시켰다. 물론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훈련을 열심히 받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훈련에 그치고 있다.

넷째, 유격전 대비 정책이다. 김일성은 한국전쟁에 대한 반성으로 1950년 12월 21~23일 개최된 별오리회의에서 “적들의 공습이 심한 조건하에서 산악전과 야간전투에 능숙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였다. 김일성 자신이 빨치산 출신이었으면서도 유격전 미비를 지적한 것은 다른 군지휘관들을 문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향후 전쟁발발시 유격전을 펼치겠다는 결의와 함께 군사부문을 비롯한 모든 부문을 유격전 대비체제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전민

55) 1999년도 북한의 군사비는 총예산의 14.5%인 13.6억 달러로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총예산의 30% 이상이 될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9」, p. 39.

무장화'와 '전국요새화'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거의 모든 군사시설들이 지하화되었고,⁵⁶⁾ 전 사회가 군사동원체제로 전환되었다. 특히 1969년 허봉학, 최광 등 '군벌척결' 이후 군대의 경량화, 정규부대와 유격부대의 배합전술 도입, AN-2기 저공침투 비행기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표 5> 북한의 군사비 지출 내역('65년~'72년)

단위: 북한화 10,000원

연 도	국가예산	군사비지출	비율(%)
1965	347,613	27,809	8.0
1966	357,140	35,714	10.0
1967	394,823	120,026	30.4
1968	481,289	155,938	32.4
1969	504,854	156,506	31.0
1970	618,662	191,785	31.0
1971	727,727	218,320	30.0
1972	734,400	125,606	17.0

출처: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p. 1581.

2. 유형의 군사력

가. 재래식 무기

첫째, 소총의 경우 북한은 1958년 소련과 AK-58을 비롯하여 80밀리와 120밀리 박격포, 7.62밀리 경기관총, 40밀리 RPG-2 대전차포,

56) 지하화된 주요 군사시설은 약 8,000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 뉴스 주간판(제1180호)」, 1999.9.30, p. 북D8.

82밀리 무반동총, 그리고 14.5밀리 대공포 등의 무기에 대한 조립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1960년대에는 소화기 분야에 거의 모든 무기를 모방생산하게 되어 지상군 연대급 편제 기본화기를 생산하게 되었다. 이후 1972년에는 72년형 기관총을 자체 모델로 제작하게 되었으며 74년부터 AK-74를 자체 개발하여 80년대에는 해외에 수출하는 생산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AK소총의 생산 능력은 연간 12~20만 정으로 추정된다.

야포의 경우 1950년대 도입된 장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비 및 부품생산기술을 확보한 후, 1960년대부터 122밀리와 130밀리 견인포를 모방생산하게 되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 북한은 152·170밀리 견인포를 개발하는 동시에 모든 구경의 야포를 자주포로 교체 생산하게 되었으며 1989년부터는 신형 170밀리 자주포⁵⁷⁾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방사포(다연장 로켓포)의 경우는 1970년대 소련제 122밀리 방사포를 모방생산한 기술을 바탕으로 1985년부터 240밀리 12연장의 대구경 방사포를 자체 개발·생산하고 있다.

요컨대, 총포분야의 경우 현재 북한은 거의 모든 무기를 자체개발, 공급할 수 있는 독자무기 생산단계에 있다.

둘째, 전차의 경우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소련제 T-54/55, 중국제 T-59 중전차를 대량으로 도입하여 정비 및 부품제작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1973년부터 중국제 T-59 중전차를 모방생산한 이후 1978년부터 소련제 T-62 전차를 소련의 기술지원하에 생산하여 현재까지 주력전차로 사용하고 있다. 경전차는 1966~68년 기간중 총 150여대의 소련제 PT-76 수륙양용 경전차를 도입한 이래, 1985년

57) 1978년 170밀리 견인포(M1978)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1989년 개발한 170밀리 자주포(M1989)는 T-59 탱크에 탑재하여 기동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북한의 전방 군단에 1개 대대, 그리고 국가급포병부대(포병군단)에 배치되어 있다.

부터 M-1985 수륙양용 경전차를 자체개발 생산하고 있다. 주력전차인 T-62의 경우 연간 생산능력은 대략 200여대수준, 경전차인 M-1985의 경우는 연간 100~150대 정도로 추정된다. 전차 및 장갑차의 경우 부품의 자체 제작능력은 90%이상으로 북한은 특수 장갑재료, 정밀부품 등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도입하고 있다.⁵⁸⁾

북한이 총포와 기동장비 분야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상당한 독자개발능력을 보유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적절 성능의 단일 무기에 대한 대량생산 체계를 선호하는 ‘동구형 무기체계’ 방식을 따른 데 있다. 대체로 구소련을 위시한 동구형의 무기체계는 전장에서 대량 소모를 전제로 무기체계의 개발시 ①설계가 단순하고 부품의 수를 최소화하고 ② 무기체계간 부품의 호환성이 높으며, ③개발 실패시 투자재원 손실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경향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기·장비의 종류에서 북한은 남한에 비해 단순한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자체 생산능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탄도미사일의 경우 북한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계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노력은 1976년부터 중국의 DF-61 개발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중국을 통한 미사일 개발 기술의 획득은 동 계획이 중국 자체의 국내 사정으로 중단되면서 좌절되었다. 이후 북한은 소련제 스커드-B 미사일 모방생산에 전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초 이집트와의 군사협력계획의 일환으로 소련제 스커드-B와 수송차 겸용 이동 발사대(MAZ-543)를 인도하게 되었으며, 1984년에는 이의 역설계 모방생산

58) 최성림, “북한의 방위산업 현황,” 「북한연구」 (1992 가을호), p. 112.

을 통하여 개량형 스커드-A를 독자생산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개량형 스커드-A는 액체연료로 추진되며 간이관성유도방식으로 이동용 트레일러에 탑재되어 이용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부 재원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북한이 스커드-A 개량형 미사일을 대량생산하여 실전에 배치한 흔적은 없다. 다만 동미사일의 역설계 개발을 통하여 설계 및 제조에 관한 자료를 취득하고 자신들이 생산하기에 적합한 모델을 구상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유도 미사일 무기체계의 '개념정립형' 시제품으로 개발한 흔적이 짙다.

북한은 이듬해 스커드-B 개량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 이는 종래 스커드-A 개량형에서 사거리를 15%(40여 Km) 증대시킨 것이다. 스커드-B 개량형은 북한에서 실제로 양산체제에 도달한 최초의 미사일이다. 북한은 1985년 이란-이라크 전쟁 중 이란과의 미사일 기술 쌍무교환 협정을 체결하였는 데 이란이 북한에게 미사일 프로그램의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북한은 생산된 스커드-B 개량형을 판매하는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86년부터 스커드-B의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 198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00여기의 미사일(5억 달러 상당)을 이란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북한은 연간 100기 이상의 스커드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후 스커드-B 개량형의 사거리를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는데, RM방향은 종래 스커드-B형의 탄두무게를 1,000kg에서 800kg으로 줄여 상대적으로 연료장입량을 늘려 사거리를 연장하는 단순한 방법이었으며 그 결과가 1990년 시험발사에 성공한 스커드-C 미사일이다.⁵⁹⁾ 이러한 개발에 힘입어 북한은 1992년 이란에 스커드-B-C 170기와 5대의 이동발사대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⁶⁰⁾

<표 6>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현황

구분	개량형 스킨드-A	개량형 스킨드-B	개량형 스킨드-C	스킨드-D (노동 1호)	스킨드-E (노동 2호) (대포동 1호)
시험발사	1984	1985	1990	1993	1998
사정거리 (km)	300	340	500	1000-1300	1500-2000
탄두중량 (kg)	985	985	700	1,000	1,300
전장(m)	11.25	11.25	12.55	15.5	15.5
직경(m)	0.88	0.88	0.88	1.3	1.3
엔진수	1	1	1	4	4
추진기관	1단 액체	1단 액체	1단 액체	1단 액체	3단 액·고체
공산오차 (CEP)	0.5-1km	0.5-1.5km	1.5-2.5km	2-4km	?

출처: 황진환, 「한국의 안보와 군비통제」 (서울: 鳳鳴, 1998), p. 107.

한편, 북한은 1986년 인민군 제4군단 예하에 미사일 부대를 창설 하였으며, 1988년에는 연대규모(스킨드-Bgud 장비, 1개 연대분발사대 24기 추정), 그리고 1991년에는 여단 규모(스킨드-B·C 혼재운용), 1999년에는 사단규모⁶¹⁾로 증편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

59) 스킨드-C 개량형에 대한 첫 번째 시험발사는 1990년 노동 시험시설에서 남 쪽으로 발사되어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두 번째 시험발사는 1991년 7월에 있었으며 이때에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제작한 이동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통신」, 1991.10.4.

60) 「동아일보」 1992.6.5.

며, 총 36기의 스커드-B·C 발사대가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3년 5월 노동 1호 및 1998년 8월 대포동 1호 시험발사가 확인됨으로써 북한이 보다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서방측에 탐지되었다. 이들 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의 대부분과 대만, 북경을 포함한 중국의 일부, 그리고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 미국의 알래스카까지 사정권하에 둘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의 탄두에는 기존의 재래식 탄두이외에 생·화학탄과 핵탄두까지 적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은 신모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2,000Km 사거리의 대포동 1호 및 3,500Km 사거리의 대포동 2호를 개발 또는 개발중이다. 대포동 1호는 1998년 8월 31일 발사시험에 성공하였으나 북한은 이것이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북한은 '광명성 1호'라고 명명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포동 1호는 노동 1호와 달리 액체연료와 고체연료를 쓰는 3단계로켓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북한 미사일기술의 획기적 진보를 전세계에 과시하였다.

한편 이와함께 탄도미사일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밀 관성항법장치 개발이 달성되어야 하는데 지난번 대포동 1호발사에서 드러났듯이 관성항법장치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정확성을 결여한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계 미사일은 '정밀표적용'이 아닌 '지역표적용'으로서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할 경우 가공할 파괴력을 지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화생무기와 함께 중·장거리 미사일을 생산·보유하는 목적은 이러한 무기들이 자원절약형으로서 전략적 위협과 협상의 수단임은

61)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9」, p. 41.

물론 전술적으로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함정 분야에서 북한은 1960년대부터 소형 어뢰정, 초계정 등 함정의 자체 건조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 호위 구축함, 상륙정, 어뢰정, 잠수함·잠수정 등의 건조에 주력하였다. 중소형 함정들은 1960년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설계도면과 기술을 지원받아 모방설계로 시작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 거의 모든 함정을 자체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초계정(patrol boat)의 경우 1950년대 후반 이미 K-48급(110톤규모)을 자체 건조한 것을 비롯하여, '60년대 중반 초도급(130톤 규모)을, '70년대 중반에는 140톤 규모의 태창급 초계정을 자체 건조하고 있다. 유도탄정(missile craft)은 1960년대말 소련제 Osa-I급(165톤)과 Komarr급(75톤) 미사일적재 공격정을 도입하여 '70년대 Osa-I급을 모방, 대형화시킨 소주급(220톤)과 '80년대 초반 Komar급을 개조한 소흥급(75톤)유도탄정을 건조하였다. 이들은 모두 소련제 SS-N-2 Styx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전투함 중 최대규모를 지니고 있는 어뢰정(어뢰공격정)의 경우 이미 '50년대 후반 이원 및 신흥급을 '60년대 후반에는 35톤 규모의 안주급 등 소형함정을 자체 건조하고 있다. 1974년부터는 소련제 P-6형(64톤)을 변형한 차호급과 청진급(80톤)을 생산하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이후 남포급(82톤) 상륙정을 자체 건조해오다가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고속상륙정인 공기부양정을 자체건조 '99년 현재 140여정을 보유하고 있다. 동 장비는 지상군 1개 소대급 무장병력을 목표지점에 기습상륙시킬 수 있으며 해상과 갯벌에서도 기동이 가능하여 동·서해안 대부분 지역에 접안할 수 있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⁶²⁾

잠수함의 경우 1960년대 소련제 W(Whiskey, 1,080톤)급 4대를 도

입한 것을 시작으로 1976년부터 중국제 R(Romeo, 1,320톤)급 잠수함의 면허생산을 통하여 독자적인 생산체계를 확립하였다. 북한의 잠수함 건조능력은 1970년대 말까지 중국제 R급 잠수함에 대한 설계 수평능력을 보유하고 1980년부터 이를 모방한 Type-033/R 잠수함에 대한 건조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조능력면에서 연간 R급 잠수함 1-2정을 건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북한은 200톤급의 소형(북한에서는 '상어급'으로 분류) 잠수함의 자체 건조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⁶³⁾ 북한은 1999년 현재 총 50척의 잠수함과 40여정에 이르는 침투용 소형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⁴⁾

다섯째, 항공무기 분야는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전투기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일부 기종의 기술도입생산과 부분적인 개량능력만 갖추고 있으며 독자개발능력은 결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60년대 초기 중국의 원조하에 300여대의 Shenyang F-4(MIG-17의 중국형), 소련으로부터 다량의 MIG-21를 원조받았다. 이때부터 북한은 도입된 항공기의 정비 및 소모성 부품 생산능력을 확보하기에 노력했다. 1980년대에 소련제 Mi-2 헬기와 Yak-18 훈련기의 조립생산을 시작하였으며, 1986년부터 중국제 F-7 전투기(소련제 MIG-21의 중국형)의 조립생산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항공무기 분야에서 북한은 일부 소량의 최신에 첨단 전투기를 제외하고는 구형 무기체계

62)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9」, p. 43.

63) 이러한 사실은 1996년 9월 강릉지역의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을 계기로 밝혀지게 되었다. 동 사건을 계기로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현재 9척의 '상어급' 잠수함과 46척의 '유고급' 잠수함, 그리고 60여정에 이르는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동아일보」, 1996.10.2.

64)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9」, p. 196.

(MIG-17·19·21)에 의존하면서 이들 무기 체계의 부품의 직접생산 및 정비의 만전을 기하면서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북한은 1998년부터 러시아로부터 최신예전투기인 MIG-29를 도입하고 1999년에는 MIG-21기 40대를 비롯해 MIG-31, SU-35까지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⁶⁵⁾

그러나 지난 '서해사태'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들의 성능은 미국이나 일본 등의 첨단과학 장비의 그것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전쟁의 승패는 숙련과 기술의 차이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첫째, C4I와 BM 즉, 명령(Command), 통제(Control),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s), 정보(Intelligence), 전장운영(Battle Management), 둘째, 우주 및 지상에 위치한 정보체계를 뒷받침하여 실질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하드웨어의 확보, 셋째, 양질의 훈련이다.⁶⁶⁾ 이러한 논리에서 볼 때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이 서방의 우수한 전자장비로 무장한 군대와 충돌되었을 때 어느정도까지 지탱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나. 대량살상무기체계

첫째, 핵무기 분야와 관련 북한의 핵개발은 1965년 6월 소련으로부터 소형 연구용 원자로 IRT-2000을 도입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1974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하고 1977년 9월에는 IAEA와 「부분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여 동 원자로에 대한 사찰을 받았다. 그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에는 가입

65) 「중앙일보」, 1999.10.7; 「연합뉴스」, 1999.9.28.

66) 문정인·현인택, 앞의 책, p. 29.

을 미루어 오다가 1985년 12월 소련과의 440MW급 원자로 4기의 도입추진과정에서 소련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동년 12월 12일 NPT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동 조약 가입후 18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하는 「핵안전조치협정」(Nuclear Safeguards Agreement) 체결의무를 계속 지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1989년 9월 프랑스의 상업위성에 의해 영변 핵시설 촬영사진이 공개됨으로써 북한이 핵개발 의혹이 증폭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IAEA의 통제노력이 본격화되었다.

북한의 핵개발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핵물질의 확보량, ②고폭장치 개발 여부, ③핵실험 실시 여부, ④운반수단의 보유 여부 등이 고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 체제를 확보하려면 적어도 플루토늄 추출-고폭(기폭)실험-탄두화-운반수단의 확보 등 4개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항목별로 북한의 핵개발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핵물질(Pu) 확보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북한은 이미 플루토늄 추출에 필요한 핵연료 주기 일체를 확보하고 있고 지난 1992년 IAEA 사찰시 북한측이 직접 소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하는데 성공했음을 시인한 바 있다.⁶⁷⁾ 다만 정보의 불충분대문에 추출한 플루토늄량을 둘러싸고 북측의 주장과 한·미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미 양국의 판단은 북한이 지난 1986년 영변의 5MW 원자로의 운전을 개시한 이래 1989년 3월 연료봉을 교체하였고 이때 순도 98%의 핵탄 1~2기를 제조

67) 북한은 1992년 6월~1993년 2월까지 총 6차례의 IAEA 임시사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사용후 핵연료에서 추출했다고 하는 플루토늄과 핵폐기물 샘플을 IAEA에 제출하면서 영변 5MW원자로로서 1990년 단 한차례에 걸쳐 90g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바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그러나 동 샘플을 IAEA에서 분석한 바, 동 기구는 1993년 2월 두 샘플이 구성성분에 있어 이론에 맞지 않는 함유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할 수 있는 플루토늄 10-12Kg을 추출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⁶⁸⁾

다음으로 고폭장치 개발수준이다.⁶⁹⁾ 국방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983년부터 평북 영변 인근지역에서 고폭장치 조립 이전 단계의 고폭장약 자체성능 검사를 위한 폭발실험을 70여회 한 것으로 탐지되고 있으며, 1993년에는 핵실험의 전 단계인 완제품 고폭장치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고폭장치 완제품 제작 초기의 고폭실험을 실시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⁷⁰⁾

다음으로 북한의 핵실험 여부이다. 북한의 경우는 아직까지 핵실험을 실시하였다는 징후가 탐지되지 않고 있어 핵실험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물론 반드시 핵실험을 실시해야만 핵무기로서 완성이 되는가 여부는 분명치 않다. 핵실험 과정이 없어도 컴퓨터 시뮬레이션과정 등을 통하여 핵무기로서 신뢰성이 입증되면 실전 사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플루토늄탄은 동위원소의 불안정성과 고폭장치의 고도의 정밀성 요구로 핵실험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형편이며, 핵 개발 초기의 저조한 기술

68) 대한민국 국방부, 「핵문제 100문 100답」 (서울: 국방부 군비통계실, 1994), p. 76.

69) 「고폭장치」는 장비된 핵물질의 기폭장치로서 핵탄두 속의 분리된 상태의 핵물질을 임계상태로 압축, 결합시키기 위한 폭약장치를 의미한다. 고폭장치의 주요 구성품은 고폭약, 중성자 발생장치, 그리고 전원장치 및 전압 승압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핵폭발이 일어나는 약 백만 분의 1초 내에 핵물질을 결합시킬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적으로 핵물질의 이동속도가 최소 1,000m/sec 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폭파 속도가 빠르고 강력한 고성능 폭약이 요구되며 정교한 다중 격발장치가 필요하다. 한편 고폭실험(High Explosive Test)은 핵실험의 바로 전 단계로서 핵탄두 속에 핵물질을 장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폭장약과 격발장치의 작동상태와 성능을 실험하는 것을 말한다.

70) 국방부, 「핵문제 100문 100답」, p. 76.

수준을 감안하면 더욱 그 필요성은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이 아직까지 핵실험을 하였다는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고풍장치 등의 완성이 의문시된다고 하겠으며, 설사 이를 개발했다라도 그 신뢰성은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운반수단의 보유 여부와 개발한 핵장치의 동 운반수단에의 탑재 가능성이다. 북한은 현재 스커드-B·C, 노동 1호, 대포동 1호 등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핵탑재가 가능하다. 문제는 과연 북한이 동 운반수단을 이용하여 핵장치를 탑재, 투발할 수 있을 정도로 핵장치를 소형화하였는가 여부이다. 왜냐하면 이들 운반수단들은 모두 탄두 탑재중량이 1톤 미만으로 북한은 현재 이 정도로 탄두를 소형화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⁷¹⁾

요컨대, 북한은 핵탄두 1~2기 정도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추출,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고 초보적인 단계의 핵폭발장치의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나 소형 탄두화 능력은 의문시되어 미사일 탑재가능 및 사용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화학방무기와 관련 화학방무기(Chemical-Biological Weapons)는 인명을 살상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제조된 유독화학물질이나 살아 있는 유기체 혹은 독소를 무기화한 것으로 우선 값이 싸고 핵무기만큼 고도의 기술이 필요치 않지만 대량살상능력을 지니고 있어 흔히 '가난한 자의 핵무기'라고 불리고 있다.

화학무기와 관련 현재 러시아가 30~70만톤, 미국이 약 4만 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동안 제 3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학무기 보유국이

71) 참고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사용된 핵장치가 각각 4톤과 45톤임을 고려할 때, 북한이 설사 핵폭발장치를 개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핵탄의 중량은 2-3톤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자체 보유 미사일을 이용하여 투발할 능력은 의문시되고 있다.

있던 이라크는 걸프전 이후 유엔의 무기 특별위원회에 의해 다량의 화학무기를 폐기(4,500여 발의 충전된 화학탄, 75,000발의 비충전탄, 그리고 12,000톤의 화학작용제를 폐기처분)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화학전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화학무기는 전장에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징을 지닌다.⁷²⁾ 첫째, 신경작용제 등장으로 인한 살상능력의 증대와 투발수단의 정밀도 향상으로 재래전과 핵전의 병용수단으로 운용 가능함으로써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 둘째, 구조물은 파괴하지 않고 인간 및 동·식물 등 생명체에만 영향을 준다. 셋째, 정규전, 비정규전, 심리전, 테러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공격시 쉽게 변별되지 않는 점과 살상력의 규모 때문에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효과를 준다.

북한은 정전 직후인 1954년 화학전 부대를 창설하였고 민족보위성(현 인민무력성) 산하에 화학국을 신설하고 각 군단에는 화학방호중대가 신설됨으로써 화학·생물학전에 대한 교육훈련과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후 7년 후인 1961년 인민무력부 산하 총참모부에 핵·화학방호국을 신설하면서 본격적으로 화학무기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핵·화학방호국은 지휘부 예하에 총 7개 부서(작전부, 훈련부, 기재부, 기술부, 정찰부, 32부, 강도관리부 등)로 구성되어 있고, 지휘부가 직접관리하는 3개의 연구소(55연구소, 710연구소, 398연구소)가 있다.

북한은 1980대까지 신경가스를 포함한 화학작용제의 대규모 생산을 시작하였고 포와 항공운반수단 등 제한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탄이 개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72) 화학작용제의 종류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책을 참조. 양일우 외 (편역), 「화학작용제(Cheical Warfare Agents)」(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1997)

북한이 스커드-B 미사일을 보유하면서부터 이를 통해서 운반할 수 있는 화학탄두의 생산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나 운용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기술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국가도 탄도미사일을 운반체계에 한 화학공격을 시도한 국가는 없으며, 이라크는 이란과의 제1차 걸프전에서 포와 항공기를 이용 화학공격을 시도한 바 있다.

북한의 화학작용제 생산은 아오지, 청진, 만포, 강계, 신의주, 안주, 순창, 홍남 등 8개 지역의 비료공장 및 화학관련 산업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학무기는 신음리(2), 황촌, 사리원, 삼산동, 왕제봉 등 휴전선에 인근한 6곳의 특별탄약 저장소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⁷³⁾ 북한이 보유한 화학작용제는 사린(Sarlin, GB), 타분(Tabun, GA), 포스젠(Phosgene, CX), 아담사이트(Adamsite, DM), 머스타드 가스(Mustard gas), 염화시안(Hydrogen Cyanide, CK) 등이다. 이 중에서 사린, 염화시안(청산가리) 및 타분은 신경작용제로, 머스타드 가스는 수포작용제로 사용된다. 이와 함께 콜레라, 페스트 탄저균, 유행성출혈열 등 각종 생물학 작용제를 배양,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현재 군단급 제대에 화학대대, 사단에 화학중대, 연대에는 화학소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연간 4,500톤, 전시에는 연간 12,000톤까지 생산 가능하며 5,000여톤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북한은 각종 야전 포병의 화력지원체계를 이용하여 제한된 사거리 내에서의 공격용 화학탄을 발사할 수 있다. 또한 육군은 화학탄두 장착이 가능한 프로그(Frog)와 스커드(Scud)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만약 북한이 화학탄두를 개발하였다면 한반도 전

73)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9」, p. 46.

역에 대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⁷⁴⁾

화생무기는 저렴한 생산비용 등 경제성과 효율성이 뛰어나고 증거 인멸이 용이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금지추세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으로서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3. 무형의 군사력

무형의 군사력은 군의 사기, 훈련도, 주민의 군에 대한 신뢰 등일 것이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군의 사기나 군기강이 엉망이면 그것은 고철덩리에 불과할 것이다. 군의 사기는 체제에 대한 보위심, 임전무퇴의 정신, 살신성인 정신 등으로 승화되어 열악한 군사장비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북한군은 항일빨치산의 후예로서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는 긍지가 높은 군대이다. 또한 북한군은 독립은 물론 정권창립에 기여함으로써 북한내에서는 최고의 성분이다. 김일성은 빨치산출신들의 협조로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예우를 극진히 하였다. 물론 그 결과는 1969년 군벌주의로 나타났고, 김일성은 이를 통해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어쨌든 김일성 시대부터 전통화된 군우대정책은 김정일시대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군우대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군원료들의 권력서열 상위 진입, 장령들에 대한 승용차 지급, 입당기회 부여, 대학진학 기회부여, 기본적인 생필품 우선 제공 등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군은 ‘수령의 군대’임을 자부하고 ‘김정일장군’을 위해 ‘총폭탄’이 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74) 황진환, 「한국의 안보와 군비통제」, 앞의 책, pp. 117~121.

그러나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의 사기저하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난은 군대에 대한 보급까지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도 자력갱생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부식을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군인들은 민가에 침입, 식량이나 부식을 약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군민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해 하전사들의 영양상태가 매우 악화되고 있고 환자증대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대후 집단배치에 대한 불만이 증가되고 있다.⁷⁵⁾ '무리배치'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제대군인들의 탄광·농촌·산간벽지로의 집단배치는 대학진학이나 사무원으로서의 배치를 희망한 젊은 전사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경제난이 심화되고 농촌이나 탄광의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집단배치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전사들의 불만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지나친 장기복무로 인한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 북한군의 기본 복무기간은 8년이나 실제로는 13년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휴가가 거의 전무하고 심지어 초급장교들의 결혼까지 금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장기복무 후 적당한 직업알선이 되지 않아 전사들의 불만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둘째, 경제난으로 인해 군의 훈련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공군의 훈련비행 시간이 현저히 저하되어 공군의 전투운용 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주민들의 군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난으로 인해 군의 민가습격 사례가 빈번해 지면서 군부대 주변의 민심이 악

75) 북한은 지난 3월 16일 대홍단군에 대한 제대군인 집단배치를 필두로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 여러 지역에 제대군인들을 집단배치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정보분석국, 「북한동향(주간)」 제455호, p. 35 참조.

화되고 있다. 김정일은 민심악화 방지를 위해 1992년 3월 18일 중앙 인민위원회 정령으로 「군민일치모범군(시·구역)」 칭호를 제정, 군민일치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기관·기업소·학교 등에 최고사령관 명의의 감사문을 전달 하는 등 군민관계 개선에 매진하였다.⁷⁶⁾ 그러나 식량난은 군의 민간인 공격을 확대시켰고 이로 인해 군민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이 당장 북한군 전체의 사기를 붕괴시킬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 현재 북한군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우대를 받고 있고, 김정일도 군의 중요성을 감안, 거의 매주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다. ‘선군정치’로 대변되는 김정일의 군부정책은 군의 사기를 촉진시키고 최후보루로서의 자긍심을 제고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⁷⁷⁾ 따라서 유사시 북한군은 최소한 북한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난 심화가 지속되고 주민들의 대군부 불신이 심화된 상황에서도 군의 사기가 높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4. 소결

전체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은 막강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화생무기를 필두로 한 대량살상무기의 보유, 다량의 재래식 무기 보유, 군사시설의 지하화, 주민의 단결력과 투쟁심 등이다. 따라

76) 김정일은 군민일치운동의 일환으로 「우리초소-우리학교 운동」, 「우리초소-우리공장 운동」, 「우리초소-우리농장 운동」 등을 전개, 각 기업소·학교·농장 등이 태지를 비롯한 각종 가축 헌납, 위문편지쓰기 등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77)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영태, “북한 「강성대국」론의 군사적 의미,” 「統一研究論叢」 제7권 2호(1998), pp. 65~89 참조.

서 현재로서 북한이 「군사강국」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현대전이 최첨단 과학장비전쟁이라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의 군사력이 막강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비록 군수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재래식 무기면에서는 서방보다 20년이상 낙후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경제난으로 인해 훈련 절대량 부족, 군인에 대한 부식보급 불충분, 군민관계 악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 측면에서 북한 군사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V. 「정치대국」 평가: 정치적 통합 정도

스카치폴(T. Skocpol)은 국가가 정통성을 상실한 후에도 강제적 조직이 여전히 일관성있게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국가는 계속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대중을 기반으로 한 내부봉기에도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⁷⁸⁾ 이러한 주장에 의한다면 김정일이 강제력만 장악하고 있다면 당분간은 북한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북한은 주민들이 김정일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있다는 믿음에서 자신을 '정치대국'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 따라서 북한이 '정치대국'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습에 의해 정권을 장악한 김정일의 정치적 정당성 여부는 무엇인가? 둘째, 김정일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장악하고 있는가? 셋째,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는 어느 정도인가?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북한의 정치통합 정책

북한은 취학전, 학교, 사회, 군대 등 다양한 교육현장을 통해 체제 우월성을 교육하고 김일성·김정일에게 충성하도록 유도한다. 북한은 정치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이다. 정치교육을 통한 정치통합 정책은 사상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각종 교육기관을 통해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78) Theda Skocpol,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 32.

우월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제’나 ‘남조선괴뢰’의 복침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강조, 체제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지난 시기 사회주의권 붕괴시에도 북한체제가 견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령의 존재 등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가장 큰 미덕이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만이 ‘공산주의적 품성’을 소유한 자라고 교육되어진다. 수령·당·대중은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이므로 철저히 하나처럼 움직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치통합교육의 요체이다. 북한은 유교의 잔재인 ‘君·師·父·일체론’을 빌어 체제와 지도자를 동일시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 유발교육은 「김일성항일투쟁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정치권력의 계승의 문제가 교육된다. 즉 김일성 권력으로부터 김정일 권력으로서의 전이의 당위성이 교육된다. 이를 위해 김정일의 품성론이 교육된다. 김정일은 수령 후계자가 될 충분한 자질이 있다는 것이 강조된다. ‘김일성=김정일’이기 때문에 김일성에 대한 충성과 마찬가지로 김정일에 대해서도 충성해야 함이 강조되고 이것이 달성되었을 때만 외부로부터의 침습을 막고 국가체제를 보위할 수 있다고 세뇌된다.

둘째, 감시정책이다. 정치통합은 설득으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강제가 적절히 가해졌을 때 통합력은 극대화된다. 정치적 이탈자 방지를 위해 당기구, 사회안전기구, 사회단체 등이 동원된다. ‘3인중 1명은 감시자’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사회적 통제가 심하다. 또한 ‘총화제도’ 때문에 북한체제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1일총화·2일총화·주간총화·월간총화·년간총화 등 다양한 총화제도를 통해서로 감시통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물론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사회이탈자들이 증가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들도 사회통

제망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주목할 것은 정치적 반항자들에 대해서는 친·인척, 동료들에 대한 연대적 형벌이 가해진다는 점이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수용하는 「특별독재대상구역」이 10여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폭압기구를 통한 정치통합은 언젠가 한계를 들어낼 것은 분명하나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 주민의 정치의식 수준에서는 단기간내에 정치통합이 깨질 것 같지 않다. 엘리트들의 보수적 성향, 이로 인한 대안세력 부재, 주민들의 우민화 정책 성공, 인민군의 친정권적 정치화 등이 북한체제의 정치통합을 촉진시켜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보상정책이다. 북한은 정치통합을 위해 강제적 방법외에 설득적 방법도 병행사용하고 있다. 북종자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은 물론 생명보장이다. 일반적으로는 직장·주택·배급·의료·교육의 보장이다. 이외에 김정일이 애용하는 보상방법은 선물지급이다. 소위 '선물정치'라고도 할 수 있는 이것은 환갑이나 고회를 맞은 자들에 대한 생일상 차려주기, 국가공훈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선물지급, 각종 영웅칭호 및 훈장 수여, 평양거주 허가, 당원 가입, 해외여행 허가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현재 중앙당간부 또는 도·군당 주요간부들은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배급을 받고 있는 바, 이것은 김정일의 특별배려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⁷⁹⁾ 따라서 북한 권력엘리트들은 자신 및 가족들의 생명부지를 위해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

79) 최은화·신상욱, 「조국은 저하늘 저멀리」(하), p. 314.

2. 김정일의 정치적 정당성

가. 북한의 권력창출 방법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고이면서 유일지배자인 수령의 지위를 이양받아야 한다. 물론 북한법률에는 수령후계문제에 대해 언급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주체사상에 입각한 후계자론이 후계선임의 실질적 규범이다. 수령은 정신적 역할을 하고 따라서 수령의 전수는 북한인민들의 정신세계의 전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이양 곧, '신내림'은 수령인 김일성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영적' 작업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령의 지위를 이양받는 것이 제도적 최고지위를 이양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김정일이 당총비서, 국방위원장 등의 지위를 점유한다고 해서 곧 수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수령은 최고녀수로서 인민의 정신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총비서등의 지위를 점유하지 않고 수령의 지위를 점유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즉 수령권위 획득을 위해서는 제도화된 최고지위 획득 또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이제 김정일은 수령의 후계자이다. 김정일이 수령 후계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후계자로서의 '신내림'을 받았느냐의 여부를 고찰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김정일 권력의 정당성

막스 베버(Max Weber)는 세 가지의 정당한 지배유형을 들고 있다. 첫째는 전통적 지배의 정당성이다. 이것은 오랜 전통이나 관습이 통치자의 지배에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경우이다. 즉 오랜 시일에 걸친 전통과 관습 때문에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국민이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전통적 정당성은 어떤 법규에 대한 국민의 복종이 아니라 전통적 절차에 의한 국민의 복종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전통적 지배하에서는 전통 자체가 최고의 권위이다. 결국 전통적 지배는 일상적·역사적·지속적인 것을 중시하는 인간의 심리적 속성에서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봉건사회의 현상이었으나 어느 시대에서나 조금씩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경시할 수만은 없는 정통성의 유형이다.

둘째는 합법적 지배의 정당성이다. 합법적 지배의 정당성은 지배자의 자질에서가 아니라 지배자의 합법적인 정권획득 과정에서 도출된다. 즉 지배자의 등장과정 및 권력행사가 법률에 근거를 둘 때 국민은 그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된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전형적인 정당성획득 양식이다.

셋째는 카리스마적 지배의 정당성이다. 이것은 통치자 개인의 초인간적·천부적 자질, 능력, 계시, 영웅성이 근거가 되어 피지배자가 지배자의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카리스마적 지배에서는 국민이 지배자의 특수한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 결정적 특징이다. 따라서 카리스마적 지배자와 그의 추종자간에는 신뢰와 헌신관계가 형성된다.

베버는 위의 세 가지의 지배유형은 이상적 형태일뿐 시기와 장소에 따라 약간씩 변형된 형태로 등장한다고 말하고 있다.⁸⁰⁾ 따라서 북

한의 지배형태도 이 세 가지가 약간씩 조합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임은 당연하다.

여기에서는 베버의 전통적 지배 유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해 본다. 전통적 지배는 기존의 질서와 지배권력이 신성하다는 신념을 근거로 한 지배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형의 지배가 행하여지는 단체는 ‘정과 신의로 뭉쳐진 단체’이다. 전통적 지배에 있어서는 명령하는 자는 수장이나 주인이 되고 복종하는 자들은 신민, 백성이 되며 그리고 행정간부는 신료가 된다. 그런데 전통적 지배의 순수형은 가부장제이다. 가부장제란 가족공동체안에서 볼 수 있는 효성 즉, 피에 대한 복종을 미덕으로 삼는 제도이다. 즉 이 제도는 명령자의 인격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의 태도를 가장 중시한다.

또한 가부장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명령자와 복종자 사이에 주종관계는 성립되어 있지 않고 그들은 다같은 동료이고 수장은 다만 동배 중에서 수석인 자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만 지배권을 가지는 경우인데 베버는 이것을 제1차적 가부장제라고 불렀다. 둘째는 가산제(patrimonialism)이고 이것은 신분적 가산제와 가산관료제로 나뉜다.⁸¹⁾ 북한의 경우, 가부장제 중 가산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산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군주의 국가에 대한 개인재산화가 북한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가산제의 특징은 첫째, 수장의 명령권 내지는 지배권은 수장의 강대한 사권이 되고 있다. 둘째, 가산제는 반드시 관리간부가 필요한데, 인적 기구로는 군대나 무신이 중요시 되고 물질 수단은 수장이 전부 전유한다. 가산제하의 관료는

80) Reinhard Bendix, *Max Weber* (California: Uni. of California, Berkeley, 1962), p. 329; 黃山德, 「막스 베버」(서울: 서문당, 1977), p. 135.

81)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박성환, “한국의 가산제 지배구조와 그 문화적 의의,” 유석춘 편, 「막스 베버와 동양사회」(서울: 나남, 1992), pp. 359~88과 Reinhard Bendix, *Max Weber*, pp. 334~360 참조.

크게 가산관료제와 신분적 가산제로 대별되는데 북한은 가산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가산관료제 즉, 가부장적 가산제국가라 볼 수 있다.⁸²⁾

한편 대체로 전통적 지배가 행사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후계자를 내정하고 후계수업을 진행해 왔다. 이것은 세습왕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현재 북한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1960년대부터 세습을 비밀리에 준비하다가⁸³⁾ 1974년 김정일을 당내에서 후계자로 내정하였고 1980년에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 즉 김일성은 세습왕으로 김정일을 지명하였고 이것은 북한체제가 ‘김씨왕조’ 체제로 변하였음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당내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된 후 지위를 공고화하기 시작하였고 그 일환으로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강조, 수령에 대한 ‘대를 이은’ 충성을 강요하였다.

그렇다면 ‘대를 잇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김일성은 1986년 “노동계급의 당은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며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 영도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갖춘 인민의 지도자를 후계자로 내세워야 합니다.”⁸⁴⁾라고 말하였다. 여기에 품격과 자질이란 사상, 정신, 도덕적 품모와 소질, 능력 등으로 표

82) 자세한 내용은 黃山德, 「막스 베버」, pp. 142~180 참조.

83) 북한의 선전자료들은 김정일이 이미 1960년대 초 김정일이 김일성대학 재학시절부터 후계자로서 활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일성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암시를 1967년부터 시작하고 있다. 즉 김일성은 만경대혁명학원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혁명가유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의 뜻을 이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하겠습니까”고 강조하였다. 물론 이것은 김일성이 1947년에 이미 발언한 바 있었지만 이것을 재차 강조한 것은 후계구도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일성, “혁명가유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의 뜻을 이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1967.10.11),” 「김일성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421.

84)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87)」 (평양:조선중앙통신사, 1987), p. 64.

현되는 인간의 특징을 말한다. 즉 북한은 수령후계자의 품격과 자질로서 첫째, 후계자는 수령을 마음속으로부터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바치는 끝없이 깨끗하고 뜨거운 사상감정을 지녀야 하고, 둘째, 수령의 후계자는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뛰어난 영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지녀야 하며, 셋째, 후계자는 충실성과 예지, 영도력과 덕성을 그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완벽하게 지녀야 하며 이러한 품격과 자질을 빠짐없이 완전히 겸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⁸⁵⁾ 따라서 만일 어떤 후계자가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한다면 그 후계자는 그 지위와 역할에서 본질상 수령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⁸⁶⁾

그러나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실제적 이유는 위와 같은 능력의 소유라기 보다는 전통적 지배 방법에 따라 절대권자 김일성의 장자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북한은 후계자 문제의 요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⁸⁷⁾ 즉 첫째, 후계자는 전민중적 추대에 기초해서 선출해야 하며, 둘째, 새세대의 인물을 선출해야 하며, 셋째, 수령생존시에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탁월한 자질을 갖춘 수령의 후계자는 자기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민족의 번영과 민중의 행복을 보장하는 사상정신적, 물질문화적 재산으로 될 훌륭한 업적을 쌓아 올리고 그것으로하여 민중속에서 공인된 지도자로 추대되게 된다. 북한은 김정일이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보유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김정일 후계자 옹립에 대한 민중의 절절한 염원은 전국 각지로부터 매일같이 조

85)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출판사 미상, 1989), p. 36.

86) 북한은 “우리의 수령님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이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방송」, 1994.8.8.

87)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pp. 45~52.

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쇄도하는 편지, 청원서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김정일은 마침내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 비서로, 1974년 2월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사실상의 수령후계자가 되었다.⁸⁸⁾ 그후 김정일은 수령후계자로서의 지위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수령 칭호를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다.⁸⁹⁾ 결국 김정일은 북한의 권력이양 방식에 의해 김일성으로부터 수령후계자로 지명을 받았고 이로써 북한인민을 통치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탈북자에 대한 설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하는 김일성·김정일사이의 부자간 권력승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996년 조사와는 달

88) 제8차 전원회의는 원래 사회주의 대전설방침을 토의한 회의였는데 기본문제에 대한 토의가 끝나자 항일빨치산출신의 한 원로정치인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다른 문제를 하나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김정일비서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하자고 하였다. 해방 전 김일성과 항일운동을 하였고 해방후에는 김일성과 건당, 건국, 건군의 사업에서 투쟁했던 노전사들이 김일성의 수고를 덜어주고 김일성의 위업을 계승할 자를 모색중 탁월한 자질과 고상한 품모, 인민의 열망을 갖춘 김정일을 후계자로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제의가 회의참가자들의 전원찬동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김정일은 혁명 1세대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전적인 지지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주장이다.

89) 그에 대한 호칭은 ‘존경하고 경애하는 지도자(1973),’ ‘위대한 김일성주의자(1975),’ ‘민족의 앞길을 밝혀주는 향도의 별(1976),’ ‘공산주의 미래의 태양(1977),’ ‘인류가 낳은 걸출한 영웅(1978~79),’ ‘은혜로운 햇빛(1980),’ ‘미래의 수령, 탁월한 사상이론가(1981),’ ‘친애하는 지도자(1982),’ ‘영명한 지도자, 민족의 어머니(1983),’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1984),’ ‘창조와 건설의 영재(1985),’ ‘전지전능한 지도자(1986),’ ‘시대가 회구하는 세계의 향도자(1987),’ ‘김정일각하(1988),’ ‘인민의 어머니(1989),’ ‘위대한 지도자(1990),’ ‘또 하나의 수령(1991),’ ‘당과 국가와 군대의 수위(1992),’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1993),’ ‘우리당과 인민의 영명한 수령(1994),’ ‘위대한 령도자(1995),’ ‘21세기의 태양(1996),’ ‘통일대통령(1999)’ 등으로 변해 왔다. 김정일의 수령화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통일원, 「김정일우상화사례집」(서울: 통일원, 1992) 참조.

리90) 김정일 승계에 대한 불만자가 80%에 이르렀다. 불만자들의 동의 획득은 향후 김정일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정치적 과제이다.

<표 7> 권력승계에 대한 태도

단위: 인원수(명)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1	3	1	15

3. 물리적 강제력 장악

가. 당권 장악

노동당은 수령의 지시를 당·정·군·인민들에게 전달하고 그 반응을 수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노동당의 지위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노동당은 정치국과 비서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나 실질적 의미에서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비서국이 최고의 권력을 보유하고 있고91) 그 중에서도 조직지도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이다.92)

90) 1996년에는 부자승계에 대해 ‘안정적 지지’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앞의 책, pp. 38~41.

91) 당규약 제26조에는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필요시, 당인사 및 당면문제 등 당내문제를 토의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지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비서국은 당인사권을 장악함으로써 관료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92) 김정일은 “조직부는 조직권을 틀어쥐고있는 당의 심장부서입니다. 조직부는 어디까지나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 기본을 두고 사업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여 조직부의 기능이 당을 통제하는데

당 조직지도부는 당 중앙위 최고실무지도기구로서 실질적인 당 조직 및 정치사업의 총참모부이다. 조직지도부는 金父子 유일지배체제의 직접 담당기관으로서 이 기구의 지시에 의해 당 중앙위가 움직이고 북한체제가 작동되어 왔다. 따라서 당 최고기구인 정치국은 상징기구이고 비서국내의 조직지도부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그렇다면 당 조직지도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조직지도부가 각 분야를 감시하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지도부는 1~13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과가 국가기관의 주요 부서를 맡아 감시·통제·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9, 10, 13과는 폭압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검열기구, 군 등을 감시·통제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는 최후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조직지도부장은 실질적인 제2인자가 담당하여 왔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親弟인 김영주와 후계자인 김정일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영주는 1974년까지 조직지도부장을 역임, 김일성유일체제 확립에 결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김정일은 후계자로 내정된 1974년 이후 현재까지 이 직책을 맡아 현재의 북한사회주의체제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특히, 김정일은 자신에 대한 반대세력들이 싹트지 못하도록 조직지도부의 사회통제 역량과 기능을 강화시켰다.

김정일이 조직지도부를 강화시켜 온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정일은 1973년 9월 당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 비서가 된 이후 유일지도체제 확립에 부심하였다. 김정일은 1967년부터 추진해 왔던 ‘유일사상체계확립’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하자⁹³⁾ 1973년부터 1974년사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김정일, “현시기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75.6.13),”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354.

93) 북한은 1972년 헌법개정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

이에는 ‘유일지도체제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김정일은 모든 문건이 하급기관으로 하달되기 전에 자신의 결재를 받도록 지시하였다.⁹⁴⁾

김정일이 김일성 유일지도체제확립 과정에서 중심문제로 제기한 것은 우선 당조직기구 체계의 개편과 함께 당사업에서 기본핵으로 되는 당·군·국가 간부사업체계를 재정비·수립하는 문제, 당사업 지도 검열체계의 정비, 당간부대열의 정화, 지도이론과 방침·방식의 침투, 간부·당원들의 당조직생활과 그의 지도체계의 정비·강화, 당홍보사업 체계의 정비·수립문제 등이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들을 실천함에 있어서 김정일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점은 방대한 조직을 어떻게 일원화하고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하느냐의 문제였다. 따라서 김정일이 당내 유일지도체제 확립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당조직지도부를 위시한 당조직기구들을 상황에 맞춰 정비·개편하고 간부사업체계를 정비·보강하는 것이었다.⁹⁵⁾

우선 당조직지도부가 당·정·군 전반에 걸친 간부문제를 총괄적으로 장악·관장할 수 있도록 조직지도부의 기구를 개편하고 간부사업

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제4조)”고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주체사상이 유일 지배이데올로기임을 분명히 하였다.

- 94)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아래당조직들에 내려보내는 지도서와 지시는 반드시 위대한 수령님과 나의 비준을 받은 다음에 내려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수령님과 나의 승인이 없이는 어떠한 문건도 아래에 마음대로 내려보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고 강조함으로써 김일성 결재 이전에 자신에게 사전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당사업 통제를 본격화하였다.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1974.2.28),”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p. 60~61.
- 95)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에서는 앞으로 도, 시, 군 당기구를 한 20~30% 정도 줄여 생산단위의 초급당을 강화할데 대하여 연구해보아야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하고 당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김정일,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1976.2.6),”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452.

체계를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종래에는 간부문제를 당 간부부의 지도하에 각 부서별, 기관별로 분산 취급하고 있던 것을 조직지도부가 직접 총괄적으로 장악·관장할 수 있도록 기구를 신설했다. 즉 김정일은 모든 간부문제를 조직지도부에 집중시키고 조직비서인 자신의 직접적인 지도·통제하에서 간부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간부사업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 강제기구의 작동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현재 북한의 강제기구 작동상태는 경제난으로 인해 사회일탈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원면에서는 주민 3명중 1명은 감시자라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수의 조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시자들의 감시업무에 대한 자신감 또한 체제 지탱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감시자들이 마지 못해 업무를 수행한다면 체제 지탱력은 매우 취약할 것이다. 특히 감시자들이 뇌물을 먹고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많은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시킬 것이고 폭동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감시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회의를 느낄 때는 업무에 태만하고 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불만자들의 집단화를 초래하여 폭동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현재까지는 부분적인 부패나 업무태만 사례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감시자들의 업무는 비교적 잘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감시자들이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는 이유는 이들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때문이다. 감시자들은 주민들 중 불평불만자를 색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에서 타인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1차문건을 만들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권한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감시자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은 감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된다. 감시자들은 국가로부터 정상적인 배급과 당원가입 특권, 대학입학 특전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물론 이들은 원래부터 사상성과 출신성분이 좋은 자들 중에서만 선택되기 때문에 체제 및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지만 이상과 같은 인센티브는 이들에게 체제유지와 자신의 기득권유지를 동일시하도록 만든다.

또한 주민들은 감시자들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감시자의 신분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처벌이 가혹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직설적인 불만표출을 할 수 없으며, 설사 불만을 표출하더라도 지극히 우회적인 표현을 이용한다. 이와 같이 현재의 북한체제는 감시자들을 비밀리에 전원 철수시킨다고 하더라도 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될 수 없을 만큼 감시기구에 대한 주민들의 공포감과 주민 상호간의 불신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그동안 북한은 여행증 발급을 통해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난은 주민들의 이동빈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식량부족은 중앙배급체계를 붕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식량을 자력으로 조달하도록 만들었다. 북한은 당차원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여 왔고, 북한주민들은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식량주산지로의 이동을 시작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도 식량구입을 목적으로 한 이동의 경우에는 여행증을 발급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증명통행까지도 묵인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북한사회에도 사적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아지고, 식량난이 체제를 점진적으로 이완시키고 있음을 예시해 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의 이동은

곧 정보이동을 낳고 정보이동은 상호비교를 가능하게 만들어 불만을 야기하고 집단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서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화만을 나눌 뿐 앞에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김정일의 개인 신상이나 정치문제와 관련있는 대화는 가족이나 절친한 사이가 아니면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 1998년도 개정된 '김일성 헌법'에는 이동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부당국이 이동의 자유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

나. 군부 장악

김정일은 군에 대한 통제력을 어느 정도 행사하고 있는가? 북한은 현재 117만이 넘는 대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김정일의 군권장악 여부를 밝히는 일은 김정일의 조직장악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특히, 김정일은 김일성과 달리 빨치산 경험이 없는 혁명 2세대이기 때문에 군의 강력한 지지없이 정권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후계자 내정 이후 군권장악에 매진하였고, 특히 1995년 이후에는 거의 매주 군부대를 방문 위로 및 충성유도를 실시하고 있다.⁹⁶⁾ 그 결과 김정일은 군권을 효율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군은 수령의 군대로서 수령 및 수령의 후계자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 현재 북한군은 '인민의 군대'라기 보다는 '수령의 군대'⁹⁷⁾로서 김일성·김정일의 私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당

96) 1999년 11월말 현재 김정일의 총 현지도 횡수는 64회였으며 그 중 38회(59%)가 군 관련 행사였다.

97) 북한군이 '수령의 군대'로 불리우기 시작한 것은 1980년 4월 25일 인민군

규약 제46조에도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이것은 북한군이 국가가 아닌 노동당 즉, 김부자의 군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북한군은 김일성 생존시에 이미 김정일 후계체제를 지지⁹⁸⁾한 바 있고 김일성 사후에도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적극지지하고 있다.

둘째, 군에 대한 당의 각종 통제장치가 작동되고 있다. 김부자의 私黨 격인 노동당에 의한 군통제기구 중 가장 상위기구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이다. 당규약 제27조는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과 수령의 정책노선을 군사부문에 침투시키고 이를 통해 군을 통제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군총정치국의 역할이다. 당규약 51조에는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치, 경제 및 군사분야의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들을 조직한다....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은 해당단위내에 조직된 당위원회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소속정치기관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하고 수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당규약

창건 기념일에 군총참모장 오극렬이 “김일성동지와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은 수령님의 군대, 조선로동당의 군대로서의 우리인민군대의 생명이며 우리의 혁명무력이 자기본성을 지키고 본분을 다하기 위한 근본정표입니다”라고 말한 때부터였다. 「로동신문」, 1980.4.25.

98) 1975년 당 창건 30주년을 기념하는 글에서 오진우는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뜻을 가장 정확히 구현하여 당중앙(=김정일:필자 주)이 제기하는 모든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며 최후까지 관철하고 당의 혁명적인 지도에 반대되는 어떠한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타협없는 날카로운 투쟁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오진우, “우리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적인 당이다.” 「근로자」, 1975.10월호.

52조는 “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 직속이며 그 지도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담당사업에 관해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군총정치국은 당위원회의 사업을 집행하는 기구이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당중앙위에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도 조직지도부와 軍청년동맹, 3대혁명소조로 구성된 소위 ‘1일3선보고체계’를 통해 군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고,⁹⁹⁾ 사상교육도 강화시키고 있다.¹⁰⁰⁾ 특히 최근에는 군보위사령부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¹⁰¹⁾ 군보위사령부는 국가안전보위부나 사회안전부까지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제이외에도 김정일은 군지시 확보를 위해 ‘선군정치’ 기치하에 군을 당과 같은 위상에 정립시키고 군서열 상승¹⁰²⁾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물론 군지휘관과 정치지도원간의 알력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군통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¹⁰³⁾ 북한은 양측간 갈등해소를 위해 ‘군·정배합’ 정책 즉, 당의 방침을 군지휘부와 정치지도원 책임자로 구성된 초급당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군통제는 현재까지 군의 집단적인 반항행위가 없다는 것으로 그 효과가 증명된다. 군탈영, 민가 약탈, 싸움질 등 사적인 일탈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99) 1995년에 탈북한 최주활씨의 증언에 의하면 오진우 전인민무력부장은 물론 오극렬 당작전부장까지 도청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1999.7.5.

100) 북한군은 각 부대의 중대 내무반에까지 유선TV를 설치하고 전장병을 대상으로 정치교양집회 주 3회이상, 군중문화 활동은 매일 1시간씩 진행하고 정치지도원의 교양학습도 매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 1999.11.2.

101) 군보위사령부의 조직과 역할에 대해서는 「연합뉴스」, 1999.7.31 참조.

102) 상위서열 군장성은 조명록 총정치국장 3위, 이을설 호위사령관 5위, 김철만 제2경제위원장 9위, 백학림 사회안전상 10위, 김영춘 군총참모장 11위, 김일철 인민무력상 12위, 이용무 국방위 부위원장 13위 등이다. 「연합뉴스 주간판(제1183호)」, 1999.10.21, p. 북E가2.

103) 「연합뉴스 주간판 제1189호」, 1999.12.2. p. 북F가1.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체제나 정권에 대한 반항행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¹⁰⁴⁾ 특히 경제난 이후 북한군의 역할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주민과의 관계 악화 양상은 증대되었으나 체제수호자로서의 군의 자긍심은 더욱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군민관계 악화는 향후 군의 체제수호 행위에 장애가 될 것임은 틀림없다.

4. 주민들의 김정일에 대한 태도

가. 주민들의 저급한 의식수준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북한주민들이 세습을 통해 탄생된 김정일 정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일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북한주민들은 정권교체 방법에 대해 조선시대의 세습왕조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⁰⁵⁾ 아울러 김정일은 김일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정일의 정치적 정당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북한주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거의 해방직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김정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사회에 잠재적인 불만세력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불만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북한의 원로 지배층과 주민들이 일제당시 지주의 횡포를

104) 군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최근북한실상」(1999.12), pp. 31~38 참조.

105) 귀순자 김정민씨의 증언, 1999.8.1.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곧 '악덕 지주·자본주의자들'로 가득찬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로 연상, 최소한 이러한 사태는 예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⁰⁶⁾

둘째는 체제문제와 관련, 북한주민들은 사회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보다는 관료들의 부정부패 및 오류를 더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식 사회주의나 김정일은 별문제가 없는 데 관료들의 오류로 인해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 주민들의 김정일 지지도

김병로박사의 논문을 토대로 북한주민들의 김정일에 대한 지지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는 김일성과 비교할 때 7 대 3 정도로 낮게 평가되었다. 김정일에 대한 지지도는 20% 혹은 “낮다”고 응답한 사례를 제외하면 대체로 40~50% 선으로 평가하였으나, “인민들의 지지가 있다”든지 60~70%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높게 평가한 응답자도 있었다. 이는 귀순자들이 내린 평가이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실제 지지도는 이보다 높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별개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지지율이 각각 어느 정도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의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다.

김정일을 지지하는 북한주민들은 김정일에 대해 나름대로 실무적

106) 물론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즉 북한주민들은 경제난으로 인해 전쟁승패에 관계없이 차라리 전쟁이나 빨리 일어났으면 하고 바란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승리를 전제로 한 전쟁이지 남한에 흡수되는 전쟁론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고 통솔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김정일이 1973년 이후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세력기반을 구축해 놓았다는 것과 현재 공석인 국가보위부와 당조직지도부를 김정일이 관장하고 자기 주변에 많은 정보요원¹⁰⁷⁾을 활용하여 바깥세상이 돌아가는 정세를 비교적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신뢰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김정일이 김정숙만을 어머니로 여기며 김성애는 “낳아주지도 길러주지도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선호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도 지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김정일의 퇴폐적이고 자유분방한 성격이나 돌출적이고 예상치 못하는 행동 등도 긍정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듯 보인다. 즉 김정일이 학교에서의 남녀관계가 너무 딱딱하다고 하면서 인민학교와 중학교에서 남녀반 구분을 폐지하고 남녀를 함께 교육시키도록 한 조치는 김정일의 자유주의적인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음악에서도 ‘자유주의적’인 보천보전자악단이나 왕재산경음악단을 만들어 보급시킨 것은 김정일의 업적으로 특히 젊은이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김정일의 돌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성격도 북한주민들에게는 이것이 북한의 의도대로 “통이크고 대담한” 성격으로 학습되어 있는 형편이다.

107) 부모가 고위 직책에 있지 않고 신분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 중에서 수재들로 구성된 김정일의 사조직을 일컬으며 이들은 김정일의 총애를 받으면서 많은 정보와 조언 및 정책적 자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8> 김정일에 대한 태도

단위: 인원수(명)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1	1	7	11

물론 김정일에 대한 지지도는 1996년에 비해¹⁰⁸⁾ <표 8>에서처럼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¹⁰⁹⁾ 특히 60세를 넘은 노년층에서는 김정일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김정일이 1992년 군최고사령관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軍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정일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일반주민 사이에 확산되었다. 그러나 사실 김일성·김정일을 별개의 인물로 간주하기 힘들며 이들의 이름을 수식어 없이 거론하는 것 자체가 힘든 북한사회에서, 그리고 부자권력승계에 대해 선불리 반대하지 못하는 북한의 현실에서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실제적인 지지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김부자에 대한 신봉이 어디까지 김일성·김정일을 위한 것이며 어디까지 자신과 가족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은 성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성분이 좋은 사람은 김정일에 대해 일반적으로 좋게 이야기한다. 북한주민 전체를 일직선상에 놓고 볼 때 일반적으로 주민의 10% 정도는 김정일에 대한 열렬한 광신도라고 볼 수 있으며, 반대쪽의 10%는 그에

108) 1996년 조사에서도 김정일에 대한 지지도가 점점 약화되는 추세였으나 1996년 조사에서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한 비율로 나타났다.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앞의 책, pp. 42~43.

109) 이는 1988년까지만 해도 위에서 기술한 것보다 김정일의 지지도가 높았으며 체제의 불만을 김정일에게 돌리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평가에 근거한다.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체제불만자 10%는 이중 8할 정도가 포섭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피해와 공포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김정일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을 서슴치 않는 대담성을 표출하는 사람도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언급은 삼가며 경제가 잘못된 것은 김정일 때문이 아니라 중간간부들의 잘못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들 중에는 경제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개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자기 자신이 불만이 약간 있더라도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김부자에 대한 충성노선을 따를 수 밖에 없으며, 혹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김정일을 지지한다.

북한인민들의 정치행위는 동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체제나 정권유지에 필요한 정치적 행사에 동원되어 각본에 의한 행동만 연출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인민 누구도 자의적으로 정치적 관심자가 될 수는 없다. 특히 북한인민들은 김일성을 절대자 내지는 초월자로 인식하고 있고 김일성의 지위나 그의 행위는 일반인들로서는 할 수 없는 지고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¹¹⁰⁾

김정일로의 승계문제도 일반주민들은 가산이 장자에게 물려지는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즉 국가전체가 하나의 가정이고 가장은 김일성, 장자는 김정일로 인식하고 설령 김정일이 김일성만큼은 특출한 능력이 없더라도 그가 정신적·육체적 불구자가 아닌 한은 어쩔수 없다는 자포자기적 의식을 소유하고 있다.¹¹¹⁾

110) 귀순자 남명철의 증언, 1999.3.15 대담. 김정일에 대한 절대적 존경심은 적으나 세습제에 대해서는 당연시한다고 한다.

111) 이은죽, “북한소설에 나타난 사회적 가치관과 인간관계유형분석,” 국토통일원, 「북한사회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166.

결국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의 권력이양은 전통적 방식의 정당성 획득 양식을 띠고 있고 북한인민들의 신민적 정치문화는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시켜주는 토대가 되고 있다. 물론 시간의 흐름과 외부정보유입 증가로 북한인민들의 자의식이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김정일의 정당성을 훼손할만큼 강한 것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근대적인 요소인 인정, 의리, 연고, 예절 등을 주요 덕목으로 삼고 있는 북한인민들이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있는 김정일에 도전하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난이 지속된다면 북한주민들의 잠재된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5. 소결

분명한 것은 현재의 북한정치체제는 ‘수령유일지배체제’라는 점이다. 비록 북한주민의 정신적 지주였던 수령과 수령의 顯現인 주석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후계자인 김정일이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북한체제를 ‘그런대로’ 지도해 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체제가 정치적 곤란을 겪을 것 같지 않다. 특히 김정일이 가장 큰 강제력인 당의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및 군권을 장악하고 있고, 비록 주민들의 절대적 지지는 못받고 있지만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저항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대국’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우선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정일에 대

한 북한인민들의 평가가 낮은 이유는 첫째, 1973년 김정일이 등장한 이후부터 북한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둘째, 김정일의 성격이 대정치가답지 못하다는 점 등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김정일이 획기적인 경제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주민폭동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그가 사전적 정통성(ex ante legitimacy)을 확보하고 있고 강제력을 장악하고는 있지만 경제난 해결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을 보장해 주지 못했을 때는 사후적 정통성(ex poste legitimacy)을 상실, 실각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취약성이 계속 남아 있는 한 북한을 '정치대국'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VI. 종합평가 및 전망

1. 종합평가

본 연구는 북한이 지난해부터 강조하기 시작한 「강성대국」 건설 주장을 평가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강성대국」을 판단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수행될 수 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국력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어떤 객관적 기준도 마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강대국인 A가 다른 강대국 B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약소국으로 분류된 C국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약소국인 C국이 강대국인 A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A국을 '大國'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강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설정은 불가능하였고 결국 필자의 자의에 의한 기준이 제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논리적 전제로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추이를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내부적 사상통일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에는 주체사상 이외에는 어떤 사상도 배태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이 자력갱생하는 과정에서 장마당이나 암시장을 통해 상거래 행위를 하고는 있으나 이것을 초기 자본주의적 행태로 규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비록 이것이 자본주의적 맹아라 할지라도 주체사상을 대체할만큼 강력하지 못하다. 물론 집단주의의 정신은 점점 쇠락해가고 있는 증거들이 나타났다. 국가보다는 가족과 나를 더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령에 대한 존경심은 변화가 없고 그것은 아랍국가들의 어떤 근본주의(fundamentalism)

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러한 사상적 공고성은 위로부터의 강제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모든 사상통제는 주민의 의식수준이 고려되어 시행된다는 점에서 강제가 작동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그 강제를 수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결국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모두 지배자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내면화된다는 점에서 북한이라는 특정한 지역에서의 주체사상도 북한주민들에게는 준수해야 할 규범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북한주민들이 자력으로든 타력으로든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거부하고 타도하려고 노력한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개방을 통해 외부사조 유입이 증대될 때에도 주체사상이 고수될 것인가는 의문이다. 즉 주체사상이 개방을 통해 자유주의와 경쟁하여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주체사상에 대한 지지는 폐쇄된 체제에서의 우세 즉, 거센 광풍이 차단된 '溫床'에서의 1위 획득이기 때문이다.

둘째, 외부침입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은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최강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규·비정규군 수, 재래식 무기의 수, 무기의 지하배치, 산악지형, 빨치산 경험, 주민들의 대미 악감정, 남한의 군사적 취약성 등은 북한의 군사적 강점이 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미사일, 화생방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남한은 물론 일본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군사력은 세계 5위 이내로 평가받을 만큼 막강하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인해 무기의 노후화, 군대의 훈련부족, 유류난, 보급난, 주민의 이탈 등이 심해짐에 따라 군의 사기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향후 언제까지 과도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셋째, 강제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해방이후 김일성은 처절한 숙청을 통해 정치권력을 유지하였고, 김정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당권과 군권 장악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주민내면에서는 반김정일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물론 반김정일 분위기가 북한사회주의 자체를 싫어하거나 주체사상을 거부하는 것으로 등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경제난 심화이후 김정일의 失政을 ‘속마음으로’ 싫어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김정일 권력도 취약해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김정일이 왜 고인이 된 김일성의 ‘망령’을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도 여기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황장엽의 망명은 반김정일 분위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치대국’은 건전한 비판세력의 존재, 권력의 정기적 순환, 시민사회의 인정 등이 전제되었을 때 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대국도 다원주의 사조가 유입되었을 때도 존속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북한의 ‘사상강국, 군사강국, 정치대국’ 달성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나 그 기반이 공고하지는 않다는 것이 종합판단이다. 이러한 사실은 김정일 정권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전망케한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목적도 김정일 정권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다는 현실인식의 발로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강성대국」 건설의 진정한 목표는 김정일 정권의 공고화에 맞춰져 있다. 결국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은 자본주의·자유주의·반독재·반개인승배 사조를 배격하고, 김정일 유일지배정권에 대한 도전을 예방하여 ‘김정일 왕국’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전 망

북한은 현재 이념·정치·경제·군사·외교·대남 등 모든 부문에서의 「강성대국」 건설을 당면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주민동원을 위해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2000년 대에도 사상·군사·정치 등 각 분야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주민동원 운동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사상분야에서는 주체사상과 함께 '김정일사상'인 '애국·애족·애민 이념'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카리스마나 정치적 권위가 부족한 김정일은 김일성을 비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김일성=김정일' 구호를 더욱 강조하는 동시에 자신의 독자적 업적을 부각시키는 선전선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자본주의 '황색바람' 차단을 위해 주체사상을 강조하고 수령과 수령후계자에 대한 충성심 고취와 집단주의의 우월성 선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사상이완 방지를 위해 군부를 비롯한 폭압기구의 대민 감시 및 탄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척결 사업이나 이를 담당할 조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군사분야에서는 「군사강국」 유지를 위해 군비현대화, 대량살상무기 개발 지속, '선군정치'를 앞세운 군우대 정책 지속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걸프전쟁이나 유고전쟁을 통해 현대전쟁은 전자전쟁이라는 점을 터득한 북한은 군비의 과학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사일이나 생화학무기 개발 또한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외적요인 즉, 대미·일관계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미사일 개발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방

위원장중심의 군우선체제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에 대한 공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사회의 병영화를 통한 체제유지 정책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동북아 안보 또는 남북군사관계의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치분야에서는 김정일의 취약한 주민 지지도 만회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가장 큰 약점은 인민경제 파탄의 주범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인민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경제회복책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방법은 자력갱생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부예비'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인민경제 회생을 도모하는 방법은 '외부예비'를 도입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북한은 국가적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미국·일본·남한·유럽 등의 원조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간헐적인 남북당국간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은 지속적인 당권장악을 위해 당중앙위 비서국 조직지도부를 더욱 확대하고 부부장급을 충성파로 보임하는 한편, 군권장악을 위해 군에 대한 통제 및 위무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은 '균형적인 당군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일은 당·군간의 충성심 경쟁 유발과 상호감시를 통해 당·군 어느 쪽도 김정일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나치게 비대된 군부의 견제를 위해 당의 위상 제고 방안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제7차 당대회 또는 제3차 당대표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 국가정보원, 「최근북한실상」, 1999.12.
- 김병로,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김상준, 「국제정치이론 II」, 서울: 삼영사, 1980.
- 김성철 외,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김용호, 「현대북한외교론」, 서울: 오름, 1996.
- Handel, Michael, *Weak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London: Frank Class and Company Limited, 1981. 김진호역, 「약소국 생존론」, 서울: 대왕사, 1995.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9」, 서울: 국방부, 1999.
- 대한민국 국방부, 「핵문제 100문 100답」, 서울: 국방부 군비통제실, 1994.
- 백두연구소 편,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 서울: 백두, 1989).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 양성철, 「분단의 정치」, 서울: 한울, 1987.
- 양성철, 「北韓政治研究」, 서울: 博英社, 1993.
- 양일우 외 (편역), 「화학작용제(Chemical Warfare Agents)」, 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1997.

- 이은죽,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법문사, 1993.
- 장병림, 「사회심리학」, 서울: 박영사, 1980.
- 장병림, 「정신분석」, 서울: 법문사, 1979.
- 조영환, 「매우 특별한 인물, 김정일」, 서울: 知識工作所, 1996.
- Ray S. Cline, *World Power Trends and U.S. Foreign Policy for the 1980s*, N.Y.: Westview Press, 1980, 崔圭莊 譯, 「아메리카의 回復」, 서울: 正宇社, 1981.
- 최 성, 「북한정치사」, 서울: 풀빛, 1997.
- 최은희·신상옥, 「조국은 저하늘 저멀리」(상,하), 서울: 행림출판, 1988.
- 최주환, 「北韓經濟論」(서울: 大旺社, 1992)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1999.11)
- 통일부 정보분석국, 「북한동향(주간)」 제455호.
- 통일원, 「김정일우상화사례집」, 서울: 통일원, 1992.
- 황진환, 「한국의 안보와 군비통제」, 서울: 鳳鳴, 1998.

나. 논문

- 문정인·현인택, “동북아의 재래식 군사력 평가: 방법, 핵심군사력, 그리고 비대칭적 균형,” 문정인 외, 「동북아 재래식 군사력 평가」, 서울: 홍문당, 1999.
- 박성환, “한국의 가산제 지배구조와 그 문화적 의의,” 유석춘편, 「막스 베버와 동양사회」, 서울: 나남, 1992.
- 이은죽, “북한소설에 나타난 사회적 가치관과 인간관계유형분석,” 국토통일원, 「북한사회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이우영, “김정일의 문예관 연구,” 「統一研究論叢」(서울: 民族統一研

- 究院, 1993년 2권 1호)
- 정영태, “북한 「강성대국」론의 군사적 의미,” 「統一研究論叢」(서울: 민족統一研究院, 1998년 제7권 2호)
- 최성림, “북한의 방위산업 현황,” 「북한연구」(1992 가을호)
- 함택영, “북한의 사회주의경제와 국방건설,”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 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국동문제연구소, 1992.
- 황산덕, 「막스 베버」, 서울: 서문당, 1977.

2. 북한문헌

가. 단행본

- 교육도서출판사 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혁명력사」(고등
중학교 제6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0
- 김민·한봉서 공저,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9: 령도체계」, 평양: 사회
과학출판사, 1985.
- 「김일성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출판사미상, 1989.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7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3.

나. 논문

김일성, “혁명가유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의 뜻을 이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1967.10.11),” 「김일성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1987)」, 평양:조선중앙통신사, 1987.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김정일, “은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1974.2.19),”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김정일, “전당과 은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1974.4.14),”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7.15),”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다. 신문 및 방송

「로동신문」, 「근로자」, 「조선중앙방송」

3. 외국문헌

Bendix, Reinhard, *Max Weber*, California: Univ. of California, Berkeley, 1962.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Fifth Edition*, New York: Alfred A Knopf, 1948.

Skocpol, Theda,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Suh Dae Sook, *Kim Il Sun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The Military Balance, 1998/99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김영춘·신상진의 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안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김영운·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정영태·오승렬외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배정호·신상진·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제: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제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윤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합의	김병로·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	이교덕	저	4,500원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군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대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실태 평가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흠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성훈	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헌경	저	5,000원
99-01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제성호	저	5,000원
99-02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이금순	저	5,000원
99-03	한반도의 비핵화실현과 남북한·일본 3국비핵지대창설	전성훈	저	6,000원
99-04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배정호	저	6,500원
99-05	남북 경제교류·협력 발전방안 연구: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대책	김규륜	저	5,500원
99-06	북한의 인사행정	최진욱	저	4,500원
99-07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구동독 지역 적용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99-08	김정일의 퍼스낼리티·카리스마·통치스타일	김성철	저	5,000원
99-09	북한경제의 변화와 인센티브구조: 비공식부문의 확산에 따른 개혁 전망	오승렬	저	5,500원
99-10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경제부문 중심	최수영	저	5,000원
99-11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이우영	저	5,000원

99-12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김병로	저	7,000원
99-13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조한범	저	4,500원
99-14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 관계: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김국신	저	4,000원
99-15	북한의 사회심리 연구	서재진	저	5,000원
99-16	전환기의 대북정책: 포용과 억지의 병행전략	홍관희	저	4,000원
99-17	4자회담의 추진전략: 「분과위」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박영호·박종철	공저	7,000원
99-18	한국사회 냉전문화 극복방안 연구	조민	저	7,000원
99-19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과제와 추진 방안	박영규·이교덕	공저	5,500원
99-20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	홍용표	저	4,000원
99-21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실태 평가: 사상·정치·군사분야를 중심으로	전현준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육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i>			
		육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i>			
		김병로·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i>		
	최의철·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9</i>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9.90
북한인권백서 2000		
	제성호·최의철·서재진의 공저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99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9~2000	6,5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99-0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5,500원
99-0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7,000원
99-0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6,500원
99-04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향	5,500원
99-05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5,0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8권 1호 (1999)	7,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7 (1998)	8,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 기타	
북한의 위기상황인식에 관한 연구	목정균 저 5,500원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경제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ku.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경제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 이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실태 평가

사상·정치·군사분야를 중심으로

인쇄/1999년 12월 26일

발행/1999년 12월 29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곽태환

편집인/북한정치군사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 900-4300 (직통)901-2525 팩시밀리 901-2542

© 통일연구원, 199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ISBN 89-87509-99-0

5,000원